



전략연구 2017-02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과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농민의 생존권 붕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국제 연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단체가 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농민의 길: La Via Campesina)이다. 이 단체는 2008년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농촌의 소농, 특히, 개도국 농민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을 발표하고 이를 유엔 차원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12년 2월 69개국 148개 조직이 모인 ‘비아 캠페시나’의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그동안 유엔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을 논의해 왔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고 도민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특히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그동안 인권선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농어민의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충남도 농민 인권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세부 내용과 이를 기초로 충남도 농민의 정확한 요구 내용을 분석하고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연계해 향후 충남도, 나아가 우리나라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가 필요한지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비아 캠페시나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의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내용을 상세히 살피는 것이다. 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는 세계화에 맞서 2001년부터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권리안을 마련해 유엔 차원의 논의를 제기해왔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핵심 쟁점사항에 관한 분석이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농민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 환경, 종자 등 물질적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민권리선언> 결의안 논의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과 논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농민인권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과제의 제시이다. 농민인권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했다. 연구 목적은 크게, 1)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의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쟁점사항 분석, 2)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민권리선언>을 토대로 충남도의 농민인권 실태 조사, 3)심층인터뷰를 통한 농민권리 보호 및 수호에 관한 요구도 분석, 4)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이다.

제2장에서는 농민권리에 관한 선행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왜 유엔 차원에서 농민인권을 중시하는 지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다. 또한 1994년의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1993년 농업인의 날에 선포된 <농민현장>, 2014년에 선포된 <국민농업현장>, 그리고 같은 해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이 선언에 담긴 “농어민의 권리”

선언에 관한 의의를 살펴보았다. 유엔에서 농민인권을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본 장에서 밝혔다.

제3장에서는 그렇다면 충남도의 농민인권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총 12명의 전문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12가지 농민권리의 각 항목별 현황과 향후 중요도를 평가한 후 향후 충남도 농민인권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생물다양성 수호권, 환경 보존권, 토지 보호권, 소득 보장권 등에 중요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앞선 조사를 통해 농민권리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도가 높은 토지 보호권, 환경 보존권, 소득 보장권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농업의 기반이 토지이지만 현재 농민은 토지소유의 문제로 인해 토지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에 대한 공개념 강화, 공유화 방안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농촌에서는 농민이 농사짓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각종 개발, 환경 유해시설의 입지, 개발 계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농민(지역주민)에게 영향이 있는 개발사업과 환경 유해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농민(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셋째, 조사 응답자들은 현재 농가의 실질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농민 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했다. 한 조사 대상자는 ‘인권 이전에 생존 차원’에서 농민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농민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민 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한다.

3. 정책 과제

본 연구에서는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5가지 정책 과제의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 2)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농민 또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은 국가 차원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고 충남도가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형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을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기준으로 재편, 2)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 3)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관리 등이다.

셋째,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2)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3)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등이다. 유엔에서 아직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지만 머지 않는 날에 통과된다면 국가 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가 필요하고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도 이를 위한 전담 부서 혹은 담당관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관련 NGO에서도 농민인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2)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3)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다. 현재까지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는 농민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향후 유엔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제도에도 농민인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계획에도 당연히 농민인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군 단위 인권증진 계획에 농민인권 분야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농민

인권까지 관여할 여력은 안 되지만 향후 여건이 갖춰진다면 농민인권 증진에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2) '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3)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농민인권은 농민 스스로 지키고 찾아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를 위해 농민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연결 고리로 해서 농민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민인권센터'(가칭)와 같이 농민인권 증진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를 통해 농민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함으로써 농민인권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세부 정책 과제	비고(실행 주체)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1)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	중앙정부(농림부)
	2)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중앙정부, 충남도
	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전담조직 설치	충남도
2.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1)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의 <유엔농민권리선언> 기준으로의 재편	중앙정부
	2)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 (모니터링)	충남도, 농민단체
	3)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마련 및 관리	충남도, 농민단체, 연구기관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1)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2)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중앙정부
	3)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인권관련 NGO단체
4.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2)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3)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충남도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1)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농민단체, 중앙정부, 인권기관 및 단체, 정당, 전문가 등
	2) ‘농민인권센터’ (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농민단체 등 NGO
	3)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농민단체, 충남인권센터 등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6
4. 분석틀 및 흐름도	9
제2장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11
1. 선행연구 분석	11
2.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성과	14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14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21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28
3. 국내 농민권리 논의 배경 및 경과	29
1)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29
2) 농업인의 날 선포와 <농민헌장>	31
3) <국민농업헌장>	33
4)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농어민의 권리	34
제3장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분석	37
1. 조사 개요	37
2.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38
1) 조사대상자의 기본 현황	38
2) 농민권	39
3)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43
4)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47
5)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49
6) 농업생산 수단의 보유권	53

7) 정보 획득권	55
8)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58
9) 농업 가치의 보호권	61
10) 생물다양성 수호권	64
11) 환경 보존권	67
12) 결사, 의견, 표현권	70
13) 정의에 대한 접근권	73
3. 종합 평가	75

제4장 주요 농민권리 실태 분석 78

1. 토지 보호권	78
2. 환경 보존권	83
3. 소득 보장권	87

제5장 정책 과제 92

1. 기본 방향	92
2. 정책 과제	96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96
2)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97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99
4)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01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06

1. 연구의 요약	106
2. 결론	108
3. 한계와 향후 과제	111

참고 문헌 113

부 록 116

표 목 차

[표 3-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	39
[표 3-2] <농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40
[표 3-3] <농민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43
[표 3-4]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44
[표 3-5]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46
[표 3-6]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48
[표 3-7]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49
[표 3-8]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51
[표 3-9]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52
[표 3-10]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53
[표 3-11]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55
[표 3-12] <정보 획득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57
[표 3-13] <정보획득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58
[표 3-14]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59
[표 3-15]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61
[표 3-16] <농업 가치의 보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2
[표 3-17] <농업 가치의 보호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63
[표 3-18]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6
[표 3-19] <생물다양성 수호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67
[표 3-20] <환경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69
[표 3-21] <환경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70
[표 3-22] <결사, 의견, 표현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72
[표 3-23] <결사, 의견, 표현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73
[표 3-24] <정의에 대한 접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74
[표 3-25]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75
[표 3-26] 농민인권 실태 및 향후 중요도 점수 종합	76
[표 4-1] 현재 농지소유 문제의 심각성	78

[표 4-2] 농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79
[표 4-3]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	82
[표 4-4] 각종 개발과 유해시설 유입으로 인한 피해 의견	86
[표 4-5] 농가소득 하락의 근본적 이유	88
[표 4-6]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근본적 대책	90
[표 5-1] <충남도민 인권 선언> 인지 여부와 농민인권 상황 평가	93
[표 5-2] 타 지역과 비교한 충남도의 농민인권 상황	93
[표 5-3] 향후 농민이 가장 보호 및 수호해야 할 권리	94
[표 6-1] 충청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110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9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10
[그림 2-1] 국제소농연대조직 비아 캠페시나(La Via Campesina)의 홈페이지 전경 ·	14
[그림 2-2] 비아 캠페시나(La Via Campesina)의 농민권리선언문	15
[그림 2-3]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농민권리선언문(2017.5)	20
[그림 2-4]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우)과 기념탑(좌)(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 소재) ·	30
[그림 2-5]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2014.10.13.)	35
[그림 4-1] 부여군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모습	82
[그림 4-2] 청양군 강정리 주민의 석면피해 관련 보도 자료	84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농민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도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농민으로서의 권한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 오랜 시간동안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농업, 농촌, 농민에 투자를 해왔던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러한 농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과도하게 추진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민의 삶은 빠르게 붕괴됐다. 특히, 1993년 UR 농산물 개방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되었고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되어 결국 농민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저하되어 왔다.

농민의 생존권 붕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국제 연대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WTO체제 하에서 미국 등 농업 선진국의 농업통상 개방 압력이 심화되고 농업 생산수단(종자, 농약, 농기계, 기타 농부자재 등)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국에서는 농업생산의 효율화를 위한 단작화, 기계화, 규모화 추진으로 중소영세농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자 각국의 중소영세농들은 현재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사체를 조직하고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단체가 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 La Via Campesina)이다. 이 단체는 2008년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농촌의 소농, 특히, 개도국 농민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을 발표하고 이를 유엔 차원에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12년 2월 69개국 148개 조직이 모인 비아 캄페시나의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이를 채택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을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꾸려 2013년

<농민권리선언>(정식명칭: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결의안을 마련하고 최종 채택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 미국은 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의 농업 선진국은 기권상태에 있다. 하지만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중소영세농의 권익을 주장하는 농민단체가 이 결의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로 시작되는 <세계인권선언문>¹⁾을 선포한 유엔에서도 <농민권리선언> 채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UN총회에서 이 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충청도는 도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고 도민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그동안 지자체 인권선언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위주에서 도 단위 인권선언으로는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 인권선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농어민의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다음은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4장 일과 권리에서 규정한 ‘농어민의 권리’이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참고: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총 6장 21조로 구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충청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유엔농민 권리선언> 결의안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충청도 농민의 정확한 요구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연계해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과제가 필요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1)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의 팔레트 사이요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선포되었다.

2. 연구 목적

오늘날 농민인권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에 취약한 각국 영세소농의 삶은 심각한 상태이다. 농민은 농민이면 누려야 할 기본권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비아 캠페시나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의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는 세계화에 맞서 2001년부터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권리안을 마련해 유엔 차원의 논의를 제기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4차례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의안 채택을 논의 중에 있다.

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핵심 쟁점사항에 관한 분석이다. 이 결의안은 단순히 농민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 환경, 종자 등 물질적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 논의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과 논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의 내용을 토대로 현재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농민인권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과제의 제시이다. 농민인권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부터 시작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행정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농업 관련 기관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방향, 각 주체별 역할과 구체적 실천 과제도 함께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 분석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헌분석, 인터뷰조사, 핵심그룹 인터뷰조사 등 세 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1) 문헌분석

문헌분석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참고했다. 첫 번째는 일반 인권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 그리고 관련서적이다. 인권의 일반적 개념과 역사, 인권의 종류와 내용, 인권의 실천과 사례 등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이와 관련한 문헌을 참고했다.

두 번째는 농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했다. 현재까지 인권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는 많이 존재하나 농민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와 보고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민의 인권 실태와 권리 보장은 주로 농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주로 논의 되어 왔다. 물론 농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이 농민인권 전반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부분은 농민인권의 실태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세 번째는 농민인권을 처음 제기했던 비아 캠페시나의 자료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유엔인권 이사회의 <농민권리선언> 결의안 내용과 관련 보고서 및 기사 등을 참고했다. 현재 유엔인권 이사회 홈페이지에는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에 관한 논의 과정과 논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게시되고 있다. 또한 비아 캠페시나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들이 게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내용을 참고해 관련 내용과 쟁점사항들을 분석했다. 또한 국내의 농민권리 관련 선언문과 헌장 등을 참고해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보도 자료를 참고했다. 언론자료는 주로 농민인권 침해 사례를 참고했다. 전국적인 사례도 있지만 주로 충청도내에서 발생한 농민인권 침해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농민인권은 범위도 넓고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서 다뤄졌던 몇 가지 사례들 위주로 농민인권 침해 사례를 참고했다.

(2) 인터뷰조사

인터뷰조사는 문헌분석, 사전 자문회의, 연구의 착수연심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해 실시했다. 인터뷰조사 대상은 일반 농민, 농민인권 및 권익 보호 관련 단체 관계자,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인권 관련 정책담당자 등 12명이다. 조사방법은 개별 대상자와의 면접을 통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핵심집단인터뷰(FGI) 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2012년에 발표된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을 토대로 작성된 농민인권 12개 조항과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이다. 12개 조항에 대해서는 서술 혹은 구술 평가로 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는 현재 실태와 향후 전망 두 부분으로 나눠 0-10점 척도로 평가했다.

두 번째는 농민인권에서 중요한 토지 보호권, 환경 보존권, 소득 보장권에 관한 질문이다. 이 세 항목은 사전 자문과 인터뷰를 통해 중요 농민인권 항목으로 도출된 권리이다.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고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했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조사 내용이다.

[표 1-1] 주요 인터뷰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기본 사항 ■ <충남도민 인권 선언> 인지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역과의 비교 ■ 중요 보호 및 수호 권리
일반 권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의 기본권 ■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 정보 획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가격과 시장결정권 ■ 농업가치의 보호권 ■ 생물다양성 수호권 ■ 환경 보호권 ■ 결사, 의견, 표현권 ■ 정의에 대한 접근권
중요 권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보호권 ■ 환경 보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보장권

(3) 핵심그룹인터뷰조사

농민인권에 관한 논의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그룹도 많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데 올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농민권리선언 실무그룹회의에 전국여성농민회 관계자의 참여를 기점으로 농민인권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민단체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농민인권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향후 농민인권 논의를 어떻게 확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핵심그룹 인터뷰조사(FGI)를 실시했다. 핵심그룹 인터뷰조사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5월 첫 번째 핵심그룹인터뷰조사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농민권리선언 실무그룹회의에 참가하는 여성농민단체 임원 등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내용 변화에 대해 점검하고, 7월 두 번째 핵심그룹 인터뷰조사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농민권리선언> 실무그룹회의에 참가한 여성농민단체 임원을 비롯해 여러 농민단체 실무진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의 쟁점 내용과 국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 연구 범위 및 개념 정의

(1) 연구 범위

농민인권의 범위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민인권의 범위는 크게 12가지로 범주화했다. 이러한 범주화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초안(2013년)을 기초로 했다. 이후 2015년, 2017년 논의에서 권리조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2013년에 제시한 초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농민인권을 범주화했다.

농민인권의 12가지 세부 권리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농민권, ②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③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④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⑤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⑥정보 획득권, ⑦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⑧농업 가치의 보호권, ⑨생물다양성 수호권, ⑩환경 보호권, ⑪결사, 의견, 표현권, ⑫정의에 대한 접근권

위와 같은 농민권리 가운데 사전 패널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거쳐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보호권, 환경 보존권, 소득 보장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범주화해 조사가 이뤄졌다.

(2)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민’에 대한 정의이다. 일반적으로 농민의 개념은 사회적(계급적) 개념이고 농업인은 경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농민의 개념은 농사를 꼭 짓지 않더라도 농촌을 지키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정식명칭: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에 관한 권리에 근거한다. 또한 농사를 짓는 농민도 주로 규모화 된 농민을 포함하는 용어인 ‘farmers’의 개념보다는 영세소농을 가리키는 ‘peasants’을 말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목축업, 임업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제1조에서 정의한 농민의 개념²⁾을 참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농민인권의 개념을 반드시 농민에 한정할 필요 없이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로 확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둘째, 농민단체에서는 이전부터 농민인권보다는 ‘농부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농부권은 토지, 물, 종자 등 농업에 꼭 필요한 요소를 농민이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농부권이 등장한 배경은 현실에서는 그러한 농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의 대부분은 임차지이고, 물과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농민들은 소득을 위해 원치 않는 작물을 재배해야하는 것 등등.

2) Article 1. Definition of peasants

1. A peasant is a man or woman of the land, who has a direct and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land and nature through the production of food or other agricultural products. Peasants work the land themselves and rely above all on family labour and other smallscale forms of organizing labour. Peasants are traditionally embedded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they take care of local landscapes and of agro-ecological systems.
2. The term peasant can apply to any person engaged in agriculture, cattle-raising, pastoralism, handicrafts related to agriculture or a similar occupation in a rural area. This includes indigenous people working on the land.
3. The term peasant also applies to the landless. According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definitio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eople are considered to be landless and are likely to face difficulties in ensuring their livelihood: (a) Agricultural labour households with little or no land; (b) Non-agricultural households in rural areas, with little or no land, whose members are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fishing, making crafts for the local market, or providing services; (c) Other rural households of pastoralists, nomads, peasants practising shifting cultivation, hunters and gatherers, and people with similar livelih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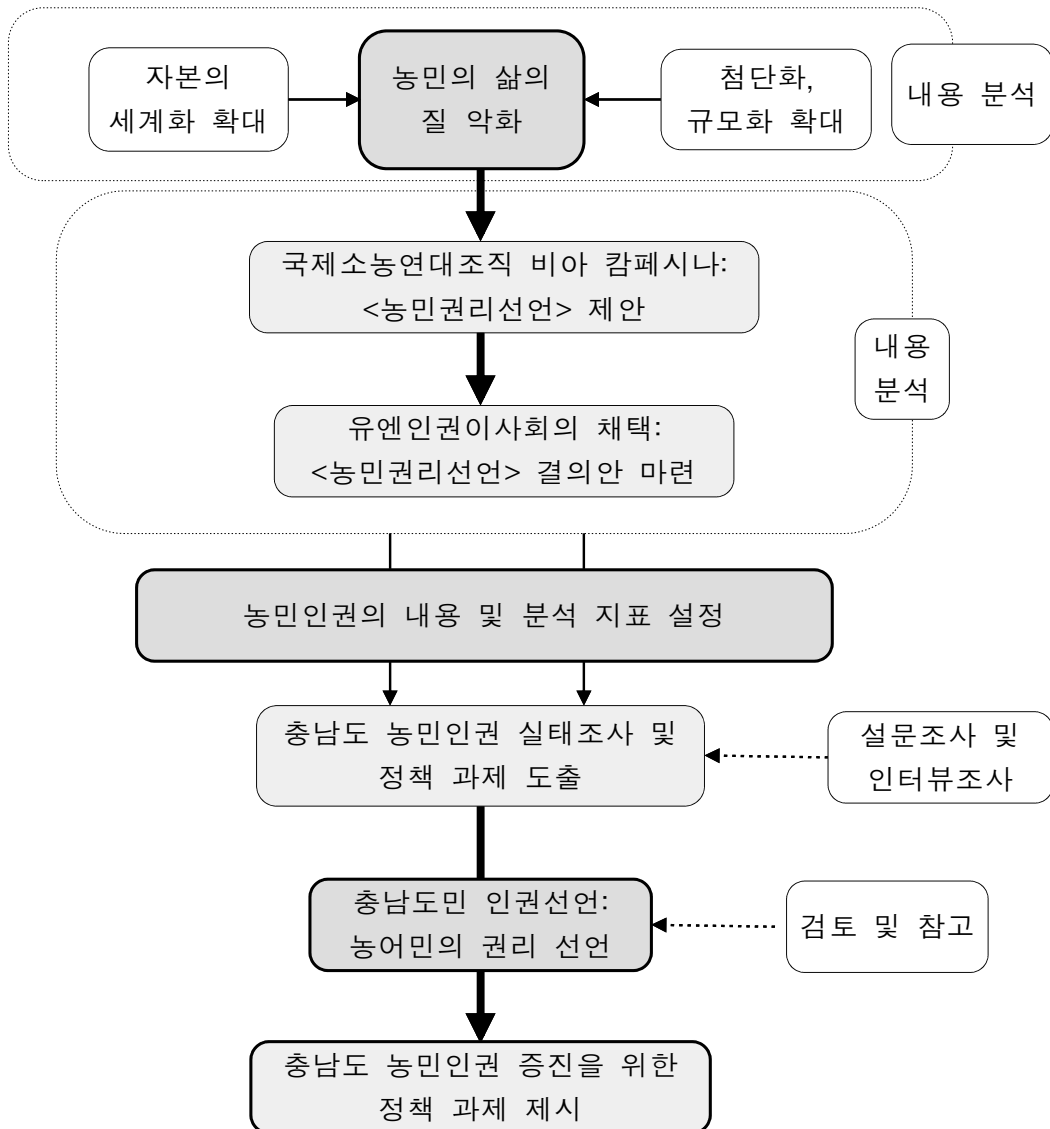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농민인권은 ‘농부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실 농민인권은 새로울 것이 없다. 농민단체에서 농민인권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던 것은 농민이 투쟁하는 모든 것들이 농민인권과 관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 단체에서 농민인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농민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농민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의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도 중요한 농민인권의 영역이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농민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제외했다. 이들의 인권 문제는 별도의 연구 과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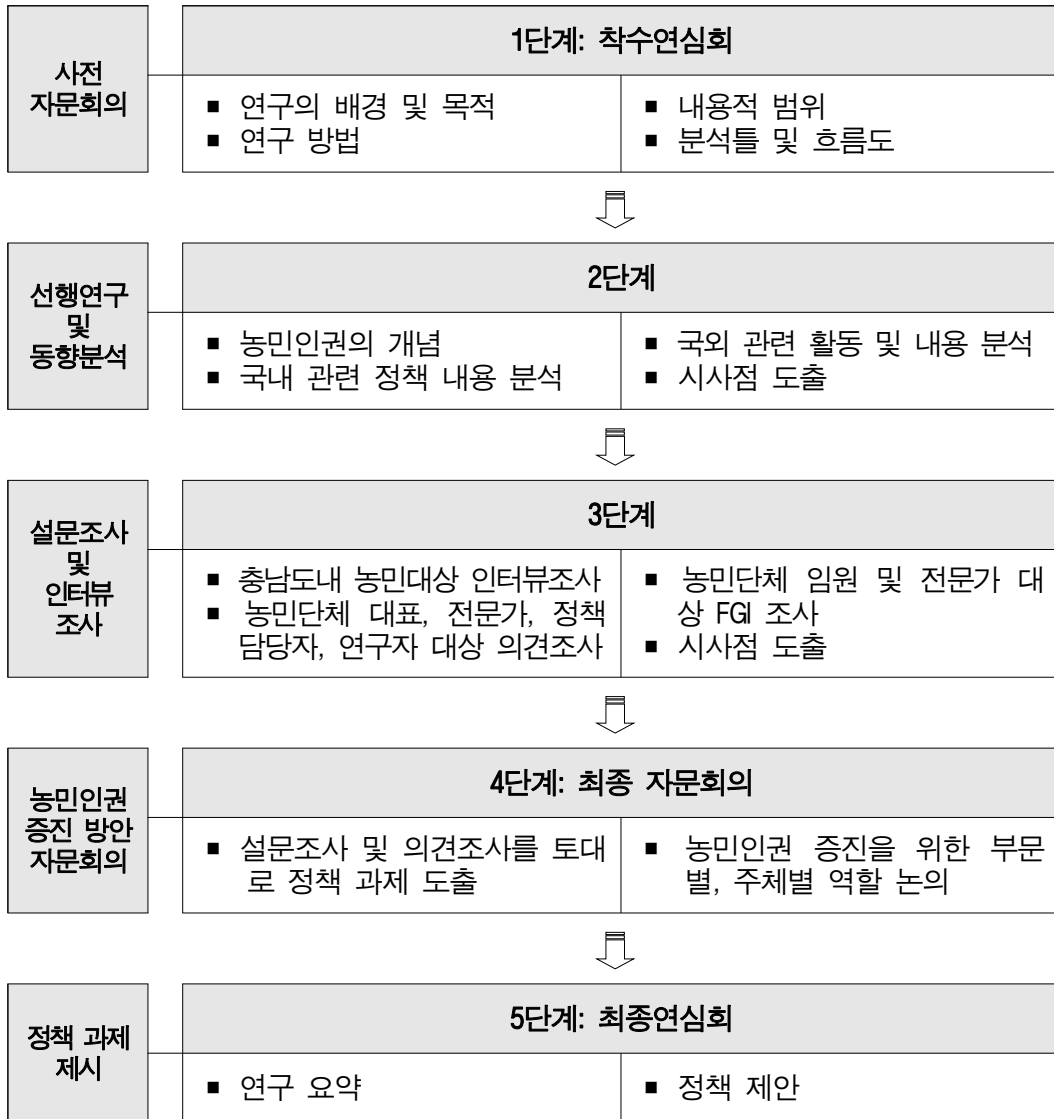
4. 분석틀 및 흐름도

본 연구는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기부터 시작해 제6장 결론까지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며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1-1], [1-2]와 같다.



[그림 1-1] 연구의 분석틀

○ 연구 흐름도



[그림 1-2] 연구진행 흐름도

제2장 선행연구 및 논의 동향

1. 선행연구 분석

국내에서 농민인권에 대한 논의는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연구보고서나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나마 박경철(2015)이 2014년에 수립된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³⁾내용 가운데 농민인권 분야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와 이수미(2016)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농민권리선언 논의 동향과 쟁점 사항을 정리한 “농민의 권리, 유엔농민권리선언”⁴⁾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농민인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농민의 삶의 질과 권리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는 도시와 농촌주민 간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과소·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노인들의 생활문제 등에 관한 연구, 그리고 농촌에서의 양성평등과 여성농민의 권리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박대식·마상진(2007)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에서 도시와 농촌 간 삶의 질 격차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고찰하여 총 19개(소득, 소비, 직업,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기초생활여건, 주택, 정보·통신여건, 대중교통여건, 생활환경의 쾌적성, 가정생활, 문화여가시설)의 삶의 질 지표를 도출했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지표별로 가중치를 구명했다. 이렇게 도출된 삶의 질 지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었다.

석소현·김귀분(2008)은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에서 도시노

3) 『열린 충남』 겨울호, pp.29-33.

4)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242 이슈보고서.

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과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자 중심의 개별화된 간호중재 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조사결과, 첫째, 농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우울정도가 더 높았으며, 도시노인이 농촌노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생활만족도는 양측에서 비슷했으나 삶의 질에서는 농촌노인보다 도시노인이 더 높았다. 둘째,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모두에서 삶의 질과 관련요인으로서는 우울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연령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도시노인과 농촌노인 모두에서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경제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지역 노인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최선미·홍준형(2016)은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에서 노인자살의 영향요인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자살’을 조망하고 노인자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했다.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째, 도시의 노인자살률이 농촌의 노인자살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성과 중첩적 사회안전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도시와 농촌 각각에서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요인에 대해서는 도시의 경우 경제적 요인, 농촌의 경우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적(관계적) 요인인 유대감의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접근성 제고와 배타성의 완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설계를 주문했다.

현재 유엔농민인권선언 논의에서도 여성농민의 권리는 중요한 쟁점이듯 농촌에서의 성별 불평등 문제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박민선·허미영(2005)은 “한국농가의 성별 불평등과 변화가능성: 가족경영협약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농가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가족경영협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가족경영협약을 작성한 농업인 부부의 워크북, 협약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3개월 후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여부, 이행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협약체결 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족경영협약이 농가의 성별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농업경영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젊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경영이 안정적인 농가들을 중심으로 이 협약을 보급하는 것이 여성의 농업정착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농촌에서의 성별 불평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제도적인 차원에서 가족경영협약서 등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농민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농민운동이다. 사실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역사는 농민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비아 캠페시나가 국제사회에서 농민의 권리를 주장했듯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단체, 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많은 농민단체 등이 각기 농민의 권리 수호를 위해 매진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발전과 도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윤수중(2010)은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과 도전” 연구에서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흐름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조직 형성과 투쟁 과정 그리고 향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 결과, 전농은 그동안 정부의 퇴행적 정책에 대한 투쟁 중심의 운동을 전개했다면 향후 새로운 운동방식을 위해서는 여성농민운동, 다양한 농촌 생활공동체운동, 대안운동 등 사회변혁 세력들과의 연대·연합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다른 농민운동단체들을 견인해 가면서 농민을 압박하는 초국적 자본의 움직임과 그 하위 파트너인 정부에 대해 농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신규·정은정(2010)은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성농민운동사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여성농민조직은 1970년대 후반에 생겨나기 시작해 1980년대 사회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농민운동도 사회의 한 부문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비로소 여성농민들은 농업현실의 당사자임을 인식하면서 ‘농민’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남성농민 혹은 가부장제의 성차별 구조와 현실 또한 직시하면서 ‘여성’의 정체성도 동시에 형성됐다. 하지만 2000년 들어와서는 투쟁만으로는 농업현실을 풀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씨앗을 지키는 여성농민’과 같이 대안을 만들어가는 여성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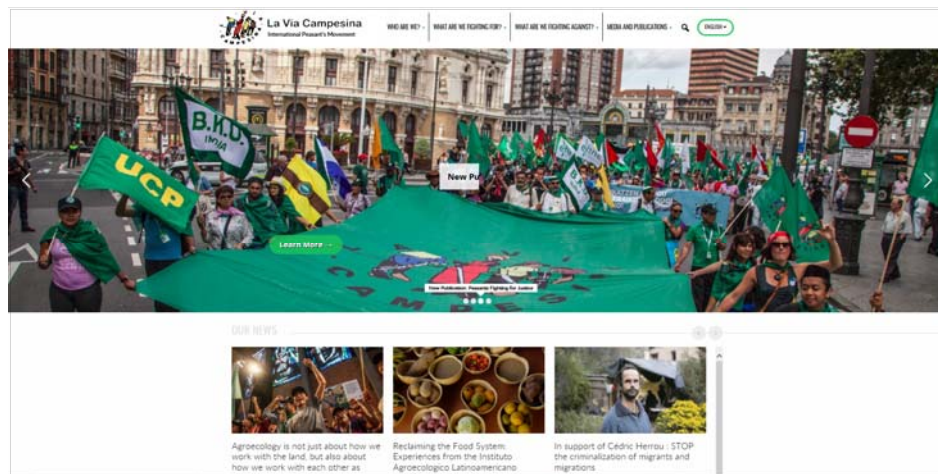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농민인권은 아니지만 지자체 단위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근해·강성권(2013)은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에서 인권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 제도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지표 개발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부산시의 성과지표(BSC)와 국가인권지표(안)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들을 선별해본 결과 부산시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한다면 부산시민만의 인권지표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2.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성과

1) 농민인권 논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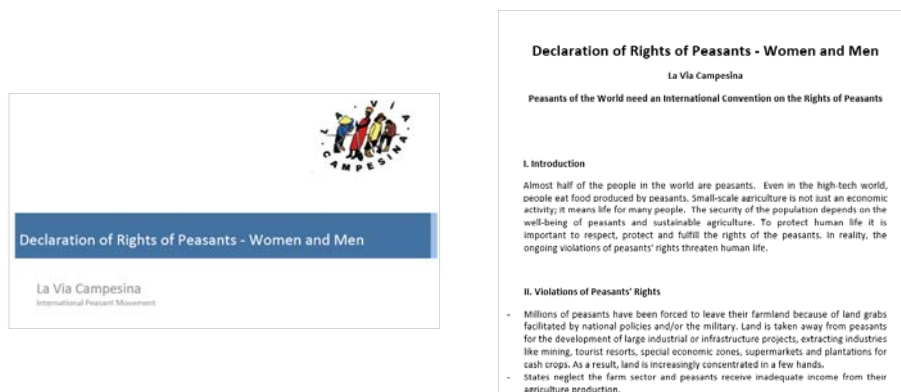
<농민권리선언>을 처음 제기한 단체는 ‘비아 캠페시나’(Via Campesina)이다. 이 조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운동조직 중의 하나인 소농연대조직이다. 전 세계 69개국, 140개 농민단체, 약 2억 명의 소농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무역조직인 WTO가 설립되기 두 해 전인 1993년, 비아 캠페시나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 토지, 소농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세계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자국의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을 지켜내는 것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다.(Golay, 2013)



[그림 2-1] 국제소농연대조직 비아 캠페시나(La Via Campesina)의 홈페이지 전경

비아 캠페시나는 그동안 세계 각국, 특히 세계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도국 소농들의 가난과 기아, 그리고 심각한 고통과 차별에 맞서 소농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개별적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농민의 존엄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농민인권 침해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비아 캠페시나는 2001년부터 농민권리선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 후 비아 캠페시나는 FIAN(Foodfirst Information and Action Network) 및 CETIM(Centre Europe-Tiers Monde)의 지원 하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매년 농민인권 침해에 관한 내부 보고서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2008년 <농민권리선언>(Declaration of on the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서울에서 열린 비아 캠페시나 농민인권회의에서 이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아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이를 채택해 줄 것을 청원했다.



[그림 2-2] 비아 캠페시나(La Via Campesina)의 농민권리선언문

유엔인권이사회는 마침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식량위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비아 캠페시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요청했다. 유엔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유엔총회도 비아 캠페시나에 같은 제안을 요청했다. 따라서 비아 캠페시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농민권리선언>을 제시했다. 특히, 식량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인 올리버 드 슈터(Oliver De Schutter)는 전 지구적인 식량위기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요했다. 그 중에서도 그는 농민의 적절한 소득, 종자, 토지와 어업에 관한 권리를 특히 강조했다.

2년 후인 2010년, 유엔인권이사회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18명의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비아 캄페시나에서 제시한 <농민권리 선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0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은 식량권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와 차별에서 주요한 희생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안이 식량권 차원에서 차별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Geneva Academy, 2015)

그 후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최종 연구를 통해 국제소농연대조직인 비아 캄페시나가 제시한 <농민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농민권리선언안>(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에 관한 권리: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종 연구에서 농민의 취약성과 차별의 주된 이유로 토지의 약탈, 강제 퇴거와 이주, 성 차별, 농업개혁과 농촌개발 정책의 부재, 최소 임금과 사회적 보호의 부족,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활동의 탄압과 범죄화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⁵⁾

자문위원회는 또한 국제인권법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기존의 인권체계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은 기아와 가난에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다중의 인권침해 희생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는 인권이사회가 실행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국제적 규범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농민권리선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국제인권법과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많은 규정과 사업들을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인권법에서의 규범적 격차를 다뤄야하며, 특히 토지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에게 토지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고 토지가 없다면 농민의 존재기반도 사라지게 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민에 대한 토지수탈은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저항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토지의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on the advancements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UN doc. A/HRC/19/75, 24 February 2012, pp.9-42.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규범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배경에서 자문위원회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먼저 하나의 선언문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을 제시했다.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 선언문은 이후 유엔인권이사회가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시킬 하나의 표준안으로 작용했다.⁷⁾

그런데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비아 캠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을 토대로 2012년 9월 <농민권리선언>을 제시하고 이를 유엔인권이사회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Geneva Academy, 2015) 먼저 이 결의안은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UN의 합의된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⁸⁾ 국가의 의무와 사회보장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도 담아내지 못했다. 게다가 모든 조항에서 ‘여성과 남성(women and men)’을 언급한 비아 캠페시나의 선언과는 달리 자문위원회의 내용은 성평등과 농촌여성의 권리 보호와 촉진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⁹⁾

그래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개방형 국가 간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인권에 관한 유엔 선언문 작성 임무를 맡은 실무 그룹의 구성은 비아 캠페시나와 같은 국제적 농민조직과 인권 활동가들이 10여년 넘게 활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무 그룹의 구성 이후 이 조직의 수석 보고관(Chairperson-Rapporteur)을 맡은 나바로

6) 앞의 보고서, pp.43-64.

7) 앞의 보고서, p.72.

8) 가령 <농민권리선언결의안> 중에 ‘right to reject’, ‘freedom to determine prices’는 유엔의 합의된 언어표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9) 유엔인권이사회는 몇몇 국가들은 자문위원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자문위원회의 선언문 초안에 찬성, 반대, 기권한 국가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찬성)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칠레,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쿠바, 지부티,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러시아, 태국, 우간다, 우루과이 등 23개 국가, (반대)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 9개 국가, (기권)보츠와나, 요르단, 쿠웨이트, 리비아, 몰디브, 모리타니, 모리셔스,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카타르,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스위스 등 15개 국가.

라노스(Navarro Llanos) 대사가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토대로 실무 그룹에서는 자문 위원회가 제시한 <농민권리선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언어 표현을 UN의 합의된 언어로 수정하고 기존의 권리 외에 농민의 세부적인 요구를 보완하는 한편 차별과 취약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농민인권에 관한 합의된 언어는 주로 국제인권법(조약, 선언, 그리고 기타 연성법¹⁰⁾)과 FAO, ILO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이들 언어는 농민권리선언의 정의, 권리, 그리고 의무 등 많은 내용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Geneva Academy, 2015)

- 농민과 여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
- 국가의 의무
- 성평등과 농촌여성의 권리
- 시민과 정치적 권리
-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
-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 농촌노동자의 권리
- 토지, 어업, 그리고 산림에 관한 권리
- 종자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권리
- 다른 생산 수단에 관한 권리

이처럼 <농민권리선언>은 개방형 국가 간 실무 그룹에서 국제인권법과 여러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규정들을 바탕으로 논의됐다. 실무 그룹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최종 연구를 통해 2013년 6월에 제출한 농민 권리선언문을 첫 번째 회기인 당해 7월에 논의했다. 그 후 2013년 7월, 수석 보고관은 실무 그룹을 마치면서 농민권리선언의 추천 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10) 연성법(soft law)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들을 지칭한다.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이 있는 법률문서에 비해 다소 약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연성법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국제법에서 자주 쓰이던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법에서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다.(출처: 위키백과)

2014년 6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두 번째 결의안에서 유엔인권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첫째, 실무 그룹은 이사회의 29차 회기(2015년 6월) 전에 두 번째 회기를 개최한다. 둘째, 실무 그룹의 수석 보고관은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비공식 협상을 수행한다. 세 번째, 수석 보고관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선언문 초안을 바탕으로 실무 그룹의 두 번째 회기에서 새로운 내용을 준비한다.¹¹⁾ 이 결의안은 찬성 29표, 반대 5표, 기권 13표로 채택되었다.¹²⁾ 이것은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실무 그룹은 두 번째 회기를 통해 2015년에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 내용도 대폭 보완했다. 권리내용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 규정했다. 첫 번째 파트는 정의와 기본 원칙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실질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 선언문도 전체 30조로 대폭 늘어났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 선언안을 토대로 3차 세션을 개최해 논의했다. 많은 국가들이 이전보다 진전된 태도로 이 선언안에 동조를 했지만 일부 국가들은 여기에 여전히 기권내지 반대를 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논쟁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 그룹이 국가, 국제조직, 시민단체 등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며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5년 10월에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31개국이 찬성, 1개국이 반대, 15개국이 기권했다.

실무 그룹은 이와 같은 결의안을 토대로 농민권리선언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해 나갔다.¹³⁾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5월, 유엔인권위원회 농민과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제4차 회의를 위한 새로운 농민권리선언문안이 다시 마련됐다.

11)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6/26(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pp.1-3.

12)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알제리, 아르헨티나,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칠레,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바, 에티오피아, 가봉,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남미비아,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아랍 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베트남, **(반대)**체코, 한국, 루마니아, 영국과 북아일랜드, 미국, **(기권)**오스트리아, 보츠와나,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쿠웨이트, 몰디브, 멕시코,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13)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찬성)**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중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쿠바,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몰디브, 모로코,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아랍 에미리트, 베네수엘라, 베트남, **(반대)**미국, **(기권)**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라트비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마케도니아, 영국과 북아일랜드

Human Rights Council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Fourth session
15–19 May 2017

**Draft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presented by the 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The Human Rights Council,

Wishing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have been adopted at the universal or regional level,

Reaffirming that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indivisible, interrelated,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and must be treated in a fair and equal manner, on the same footing and with the same emphasis, and recalling that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one category of rights should never exempt States from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other rights,

Recognizing the special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nd the land, water, nature and territory to which they are attached and on which they depend for their livelihood,

Recognizing als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ontribution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in all regions of the world to development and to conserving

[그림 2-3]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농민권리선언문(2017.5)

유엔인권이사회는 실무 그룹이 마련한 새로운 안을 토대로 2017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어느 때보다 관심과 기대가 높았던 제4차 개방형 국가 간 실무그룹 회의, 그러나 여전히 회원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종료됐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유엔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은 현재 유엔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2018~2019년에는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1]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진행 과정

연도별	진행 사항
2001년	비아 캠페시나, 농민인권선언 준비 본격 시작
2002년	비아캠페시나, ‘농민권리헌장’을 공식 선포
2004년	전 세계 농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 인권협의회에 제출
2008년	농민권리헌장 초안 마련, 자카르타에서 농민권리대회 개최
2009년 9월	서울에서 농민권리선언 채택 후 초안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2010년	국제농민권리대회 개최, 제네바와 각국에서 로비 및 시위 캠페인 진행
2012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농민권리선언 초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2012년 10월	제21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농민권리선언을 만들기 위한 정부 간 실무그룹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A/HRC/RES/21/19) 채택
2013년 7월	제1회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 회의
2014년 7월	제26회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26/26) 채택
2015년 1월	농민 및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유엔 선언 초안(Draft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발표
2015년 2월	제2회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 회의
2015년 10월	제30회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30/13) 채택
2016년 5월	제3회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 회의
2017년 5월	제4회 개방형 정부 간 실무그룹 회의

자료: 이수미(2016). p.4 내용 추가

2) 농민권리선언의 주요 내용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문>은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발표되었고 개방형 국가 간 실무그룹 회의는 네 차례 진행되었다. 먼저, 유엔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은 2013년 6월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이 선언문의 상당부분은 비아 캠페시나가 제시한 농민권리선언을 참고해 작성됐다. 첫 번째 선언문 조항은 모두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인 농민의 정의를 제외하면 농민의 권리는 모두 12개 조항에 해당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첫 번째 농민권리선언의 구체적인 권리 조항은 다음과 같다.

1)농민의 정의, 2)농민권, 3)생명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4)토지와 영토에 대한 권리, 5)종자와 전통지식과 실천에 대한 권리, 6)농업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7)정보에 대한 권리, 8)농산물 가격 및 시장 결정의 자유, 9)농업 가치의 보호에 대한 권리, 10)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1)환경을 보존할 권리, 12)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3)정의에 접근할 권리

두 번째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문>은 2015년 1월에 발표되었다. 두 번째 선언문은 첫 번째 선언문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권리조항도 대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선언문은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권리선언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선언문 내 많은 용어와 체계가 유엔의 언어체계와 구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폭 수정했다. 또한 권리 내용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규정하였다. 두 번째 선언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줬다.

첫째, 선언문의 내용을 파트1과 파트2로 나눠 규정했다. 파트1에서는 정의와 기본 원칙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고, 파트2에서는 실질적 권리를 규정했다. 다시 말해, 파트1에서는 농민권리선언에 관한 총론을 규정하고, 파트2에서는 각론을 규정한 셈이다.

둘째, 농민권리선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동안 많은 인권선언문을 선포했지만 선언문은 선언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인권선언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많은 선언문이 강제나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의적 선언에 그치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두 번째 농민권리선언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각 국가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선언문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적 실효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만큼 각국에서는 이를 실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선언문은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선언문의 조항은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으로 유엔뿐만 아니라 FAO 등 많은 국제기구에서도 농민권리선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행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농민의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평등과 여성농민의 권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언문의 제4조가 성평등에 관한 규정이고 제7조가 농촌여성의 권리이다. 이처럼 여성농민에 관한 규정을 두 조항에 걸쳐 규정한 이유는 여성농민은 이중의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 특히 개도국 여성은 농민이라는 차별과 농촌 내 여성이라는 차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도 여성농민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권리를 규정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두 번째 농민권리선언문의 구체적인 권리 조항은 다음과 같다.

파트1-정의와 기본 원칙

1)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2)국가의 의무, 3)존엄, 평등 그리고 비차별, 4)성평등, 5)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발전 그리고 식량주권

파트2-실질 권리

6)농촌여성의 권리, 7)생명, 자유, 신체 및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8)국적 및 법적 존재에 대한 권리, 9)이동의 자유, 10)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11)결사의 자유, 12)참여와 정보에 대한 권리, 13)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 14)정의에 대한 접근, 15)일할 권리, 16)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17)식량에 대한 권리, 18)적절한 소득과 생계에 대한 권리, 19)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20)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21)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22)종자에 대한 권리, 23)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24)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25)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6)건강에 대한 권리, 27)주거에 대한 권리, 28)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9)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30)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문은 2017년 3월에 발표되었고 이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논의과정을 가졌다. 세 번째 선언문은 두 번째 선언문을 바탕으로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간결하게 통합해 전체 27개 조항으로 줄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선언문에서는 농촌여성의 권리 규정에 대해 “성평등”과 “농촌여성의 권리”로 따로 규정했으나 세 번째 선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로 규정했다. 기타 내용은 두 번째 선언문과 비슷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농민권리선언문의 구체적인 권리 조항은 다음과 같다.

1)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2)국가의 일반 의무, 3)평등과 비차별, 4)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 5)천연자원권과 발전권, 6)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7)이동의 자유, 8)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9)결사의 자유, 10)참여의 권리, 11)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권, 12)정의에 대한 접근, 13)일할 권리, 14)일터에서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권리, 15)식량과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16)적절한 소득과 생계 및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7)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8)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9)종자에 대한 권리, 20)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21)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22)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3)건강에 대한 권리, 24)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25)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6)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27)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표 2-2] 각 시기별 유엔농민권리선언문 내용

조항	2013년 선언문안(2013.06.)	2015년 선언문안(2015.01.17)	2017년 선언문안(2017.03.06)
1	농민의 정의	파트1-정의와 기본 원칙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의
2	농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국가의 일반 의무
3	생명과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존엄, 평등 그리고 비차별	평등과 비차별
4	토지와 영토에 대한 권리	성 평등	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여성의 권리
5	종자와 전통지식과 실천에 대한 권리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 발전 그리고 식량주권	천연자원권과 발전권
6	농업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파트2-실질 권리 농촌여성의 권리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7	정보에 대한 권리	생명, 자유, 신체 및 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8	농산물 가격 및 시장 결정의 자유	국적 및 법적 존재에 대한 권리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9	농업 가치의 보호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10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	참여의 권리
11	환경을 보존할 권리	결사의 자유	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권
12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참여와 정보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접근
13	정의에 접근할 권리	생산, 마케팅, 유통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	일할 권리
14		정의에 대한 접근	일터에서의 안정과 건강에 대한 권리
15		일할 권리	식량과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
16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한 소득과 생계 및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17		식량에 대한 권리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8		적절한 소득과 생계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9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종자에 대한 권리
20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21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22		종자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3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24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25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6		건강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27		주거에 대한 권리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28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29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30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3차례의 <농민권리선언문>을 발표했고, 4차례에 걸쳐 개방형 국가 간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201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4차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실무그룹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유엔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선언문 내용을 둘러싼 국가별, 국제사회그룹별 각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농민인권선언문에 관한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반대(UN General Assembly A/HRC/RES/30/13, 13 October 2015)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유엔농민권리선언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인권은 인류 보편적 권리이나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소농(peasants)라는 특정 그룹의 권리에 한정을 두었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소농(peasants)이라는 집단의 권리(collective rights)를 규정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인권 규정과 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농민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많은 권리들이 전례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종자권(rights of seed)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정의(definition)이라는 것이다.¹⁴⁾

14) 2016년 5월 16일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대표의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앞부분 생략)
The United States underscores that human rights are universe rights held and enjoyed by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societal classification or nature of their work. **The draft Declaration inappropriately singles out a group—peasant**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for special treatment with respect to the rights perspective. While the United

이러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권리선언은 개도국과 비아 캠페시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소농 연대조직의 강한 지지가 있고 유엔인권이사회도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머지 않는 날에 유엔총회에서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에서 왜 농민권리선언에 이처럼 관심을 가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문 실무 그룹의 세 번째 세션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요티 상게라(Jyoti Sanghera)는 유엔농민인권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¹⁵⁾

첫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 농민권리선언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2015년에 195개 국가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파리기후협약(COP21)을 채택했다. 2020년부터 강제 실행되는 이 협정을 위해 각국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개발해야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공급과 이용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그 가운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농업에서의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이다. 인간이 만드는 전체 온실가스 가운데 33%는 농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료 등 화학농법의 확대, 가공과 유통의 발전, 목축업의 발전과 산림 파괴 등으로 농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음식을 생산하고 먹는 것과 관련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농업과 식량체계, 그리고 토지관리는 각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는 이러한 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유엔에서의 농민권리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 것이다.¹⁶⁾

States is concerned as a matter of policy about challenges confronting members of these groups, and undertakes numerous initiatives to improve the circumstances of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we do not agree with the suggestion that these categories of individuals merit different treatment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canon.** The draft also purports to enumerate new rights for this group, including collective rights. **This efforts to create human rights for group instead of for individuals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Further, many of the proposed new rights have no precedent. For instance, **there is no internationally accepted definition of the "right to seeds."**(뒷부분 생략)(출처: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15) 다음 내용은 Ms. Jyoti Sanghera가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위한 실무 그룹 세 번째 세션에서 발언한 개회사 내용이다.

16)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글로는 조효제의 “신생에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겨레에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라는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그는 2017년 6월 27일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다음은 그의 칼럼의 일부이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 방식과 상관없이 그것을 쓸 수만 있으면 에너지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 어떻게 만들어

두 번째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 데 농민권리선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엔에서의 2016년은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새로운 지속가능 개발 2030 아젠다로 전환하는 해였다. 2030 아젠다는 2015년 9월 모든 유엔 회원국가가 채택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의 목표로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비전 가운데 몇 가지 목표는 농민인권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첫 번째 목표(Goal1)는 모든 형태의 가난을 종식하는 것이다. 이는 농민권리선언문 가운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여성의 평등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두 번째 목표(Goal2)는 식량안전, 영양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이다. 이는 농민권리선언 가운데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전 세계 식량의 공평한 공급 촉진을 포함해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이 외에도 Goal5는 성 평등과 관련이 있고, Goal8은 생산적 고용의 증대와 모두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또한, Goal14-17은 식량, 물,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Goal15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관리,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차원의 SDGs의 실현은 결국 농민인권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농민권리선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농촌여성의 권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 에너지인가 하는 점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때문이다. 나는 기후변화가 절체절명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한겨레> 지면에서 역설한 적이 있다(2015년 8월 19일치). 공교롭게도 그해 말 파리기후협정 회의 직전 국제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 인권과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단체인 엠네스티와 그린피스가 <기후변화 시대의 인권보호를 위해 100% 신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두 단체는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반세기 내에 지금의 전 세계 빈곤층에 더해 6억 명 이상이 추가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기온 상승이 2도 내에 머물더라도 인류 일곱 명 중 한 사람이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 한다. 특히 빈곤층, 여성과 소녀, 원주민, 만성적 차별을 당해 온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집단이 된다. 폭염과 신종 질병으로 연간 25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말라리아, 콜레라, 지카바이러스, Dengue열이 낫설지 않게 되었다. 열대의학으로 치부되던 곤충매개 감염 병을 보건학에서 심각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두 단체의 공동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부각시킨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통찰력 있는 삼단논법이다. ①기후변화는 인권침해의 주범 중 주범이다. ②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이므로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③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수록 인권이 좋아질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기후변화가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각국이 그렇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협정의 전문을 보라. “당사국들은 인권, 건강권, 원주민, 지역사회, 이주민, 어린이, 장애인, 모든 약자 집단의 권리, 발전권, 젠더 평등, 여성의 자력화와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증진하고 고려한다.”

원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0510.html#csidx56db454fca2b599b80a5e3e7e08dd24>

3) 농민권리선언의 의의 및 시사점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인권선언 논의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을 지라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농민’이 처음으로 인권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권의 대상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유엔차원의 농민권리선언 논의는 농민을 본격적으로 인권의 대상, 즉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게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 이래로 농민은 가장 오랜 동안 자본, 권력, 지주에 의해 착취와 억압,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 차원의 농민인권 논의는 인권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농민(농업, 농촌 포함) 문제에 대해 유엔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농민, 농업, 농촌의 문제는 현재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을 넘어선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적 공공기구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식량, 종자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독점과 세력화의 문제를 유엔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경쟁과 효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견제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농업의 기계화, 규모화, 효율화, 첨단화는 비록 편리하지만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민(중소영세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필요성을 유엔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엔에서 자유무역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 또는 지역의 생존을 위해 식량주권, 종자주권 등 자립적 경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그동안 소외되거나 무시되어 왔던 여성농민과 종자주권을 특히 강조했다는 점이다. 농민이면서 여성은 이중의 차별을 받기 때문에 여성농민의 권리 회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를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도 그동안 습관적·제도적으로 이뤄져왔던 성차별과 성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종자는 농민의 핵심 권리이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종자의 개발과 판매는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넘어간 상태이다. 이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농민의 종자권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농민권리선언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유엔 차원의 정책 목표에 농민, 농촌, 농업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 과제는 기아와 빈곤 퇴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도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과 그들의 생업인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파리기후협약 등 유엔 주도 하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의 핵심은 식량문제 등 농업문제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 식량과 자연재해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민, 농업, 농촌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농민권리선언은 큰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 농민권리 논의 배경 및 경과

1)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동학농민혁명포고문(東學農民革命布告文)은 1894년 3월 20일 동학의 지도자인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장군이 전라도 무장현(지금의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무장기포(茂長起包) 때 낭독된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혁명 선언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농민이 부패한 조정의 학정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외친 선언문은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이 처음일 것이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의 전문이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자는 가장 큰 인륜¹⁷⁾으로 꼽는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직하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를 한 뒤에야 국가를 이루어 끝없는 복록을 불러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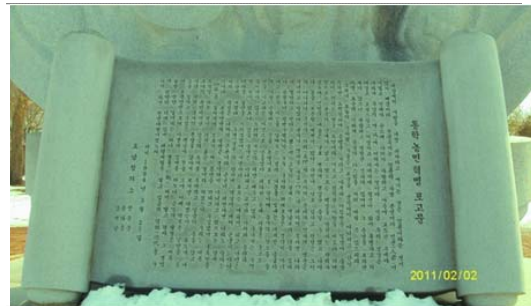
(중략)지금 신하가 된 자들은 나라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아니하고 한갓 작록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아부를 일삼아 충성스런 선비의 간언을 요사스런 말이라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라 한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벼슬아치만이 득실거린다.

17)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앞머리에 ‘인륜’을 강조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오늘날 인권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인권을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인륜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륜은 인권의 상위개념으로써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상위의 가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더욱 비틀어져서 들어와서는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와서는 몸을 보존할 대책도 없도다. 학정은 날로 더해지고 원성은 줄을 이었다.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리와 상하의 구분이 드디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관자가 말하길 ‘사유(四維)[예의엄치]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고 하였다.(중략)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는 고향집을 화려하게 지어 제 살길에만 골몰하면서 녹위만을 도둑질하니 어찌 옳게 되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이나 임금의 토지를 갈아 먹고 임금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망해 가는 꼴을 좌시할 수 없어서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오늘의 광경이 비록 놀랄 일이겠으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면서 함께 태평세월을 축수하고 모두 임금의 교화를 누리면 천만다행이겠노라.



[그림 2-4]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우)과 기념탑(좌)(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수내 소재)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이 포고문을 기점으로 동학농민군은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보국안민(輔國安民), 척양척양왜(斥洋斥洋倭)의 깃발을 들고 가림주구의 탐관오리와 부패한 조정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무능력한 조정은 오로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외세를 끌어 들여 동학군과 맞서게 했다. 조선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던 청군과 왜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입해 관군과 함께 동학군을 토벌했다. 결국 동학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왜군의 포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해 11월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거의 섬멸당해 동학농민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우리나라는 오랜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었지만 곧바로 이어진 남북 분단과 동족 간 전쟁, 그리고 냉전과 독재를 거치면서 자주적인 권리를 찾고자 하는 농민들의 권리운동은 사실상 휴면기에 들어갔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그리고 군사독재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긴 했지만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전국 단위의 거국적 저항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시작된 농민의 자주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정신은 농민들 마음속에서 유유히 계승되고 있다.¹⁸⁾

2) 농업인의 날 선포와 <농민현장>

해방 이후 바로 이어진 남북분단과 동족 간 전쟁, 그리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등 군사독재의 오랜 암흑기를 끝내고 1990년대 민주화시대를 맞아 농민들도 본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1989)과 전국농민회총연맹(1990)이 결성된 시기도 이 무렵이다. 그리고 농업계의 오래된 숙원인 농민의 날 제정과 농민현장을 논의됐다. 그 결과 농업계는 1991년 12월 농민의 날 선포식을 거행하여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의 공식기념일로 지정¹⁹⁾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93년 11월 11일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의 사명을 담은 <농민현장>

18)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다. 지난 2016년 겨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항의시위 때 전농은 '전봉준투쟁단'의 이름으로 강렬한 시위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폐정개혁안을 선언했듯이 전농 또한 '새나라 건설'을 위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했다.

19) 농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이후 1994년 활동을 재개하여 1995년 12월 총무처에 '농업인의 날' 제정을 요청하고 1996년 5월 총무처는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제정, 공포하게 된다.(국민농업포럼, 2014)

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 <농민헌장>은 농민의 권리를 선언했다기보다는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농민의 역할을 천명한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은 이 나라 건국 이래 한결같은 근본산업이었으며, 이를 지켜 가꾸어온 농민은 민족 자존의 바탕이었다. 과학문명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달할지라도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와 농민에게 주어진 사명과 금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은 역사적 사명을 깨달아 줄기차게 농민의 정신혁신, 농업의 기술혁신, 농촌의 생활혁신으로 복지농촌건설에 앞장서서, 이 나라 농업의 크나큰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며, 국가는 농민의 인격권과 농촌의 환경권 그리고 농업의 산업권을 항상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조국강토를 겨레와 인류의 영원한 삶의 젖줄로 삼아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고자, 이에 지켜야 할 농민헌장을 제정한다.

1. 우리 농민은 농업이 영원한 인류의 기본산업임을 믿고, 나라의 번영과 겨레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농업의 깊은 뿌리가 되고자 힘쓴다.

1. 우리 농민은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지키고 농심의 바탕위에서 선조들이 이룩한 성실과 근면의 정신풍토를 이어간다.

1. 우리 농민은 국토의 자원과 환경을 잘 보존하여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을 가꾸기에 앞장선다.

1. 우리 농민은 농심을 천심으로 믿고 힘을 모아 창익의 슬기를 키워서 복지국가, 복지세계 건설에 이바지한다.

1. 우리 농민은 협동단결로 스스로의 생활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국익과 인류평화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인다.

20) 농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농업인의 날 제정과 <농민헌장> 제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점은 한계가 있지만 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농민헌장>을 선포해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후 농민의 염원과는 달리 정부가 UR협상을 시작으로 농산물수입개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날 제정과 <농민헌장> 선포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국민농업현장>

정부와 농업계는 1993년 11월 11일 제1회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농민현장>을 처음 선포했지만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농업계는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계 내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를 움직여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농업현장>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즉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는 비단 농업계 내부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वाद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명시한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국민농업현장>이라는 긴 이름이 보여주듯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국민운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농업현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국민농업현장(일부 내용)

국민 실천 강령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단체·개인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교육: 씨 뿌리고 가꾸며 수확하고 조리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건강·환경·배려의 식생활 교육을 실천한다.
2. 문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우수한 우리 음식의 멋과 맛을 알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농촌 체험, 도농 교류의 생활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복지: 친환경 먹거리와 지역 먹거리를 확산시켜 영양과 안전이 확보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누구에게나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환경: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꾸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다양한 생물이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는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한다.

5. 노동: 농업과 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공동화와 도시 밀집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 사회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6. 경제: 사회 전반에서 협동을 장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와 상호 협력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체계와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농어민의 권리

다음 내용은 지난 2014년 10월 13일에 선포된 <충청도민 인권선언> 전문이다. 충남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권선언>을 제정했다. 그런데 ‘농민의 권리’를 선언문에 담은 지자체는 충남도가 유일하다. 충남도 안희정 도지사는 2010년 취임 이후 3농혁신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권리와 행복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농민의 권리’를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담은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충청도민 인권선언>에서 농민의 권리는 제4장 일과 권리, 제12조 농어민의 권리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림 2-5]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2014.10.13.)

<사진자료: 충남도청>

충남도는 <충청도민 인권선언>과 함께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농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사업 및 시책을 제안했다. 세부사업 및 시책으로, 1)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2)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3)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4)풀뿌리 마을환경감시 강화, 5)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충남도는 매년 초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 보고회를 통해 정책사업을 통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농정분야 시책을 통해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다. 이 사업은 20-65세의 여성농어업인에게 매년 15만원(자부담 3만원)을 지급해 문화, 복지, 의료 분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상의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의 인권증진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제3장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분석

1. 조사 개요

현재 국내외 학술연구 영역에서 농민인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농민인권의 개념을 포함한 실태조사 연구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때문에 농민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과 항목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논의 끝에 농민인권의 실태조사의 기준과 항목으로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실무그룹에서 논의한 <농민권리선언> 내용을 참고했다. 제2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자문위원회는 2012년에 처음으로 <농민권리선언>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의 개방형 국가 간 실무그룹회의를 갖고 <농민권리선언>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관해 각국의 입장이 달라 아직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세 차례에 거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다. 2013년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2015년에는 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이 대폭 추가해 30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7년에는 중복된 내용의 항목을 줄여 27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는 농민인권의 조사 기준과 항목으로 2013년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을 참고로 했다. 그 이유는 첫째, 2013년도 이후 마련된 <농민선리선언>은 기본적으로 2013년 안을 토대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2015년과 2017년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은 분량과 항목 수준에서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농민인권 실태조사의 기준과 항목 설정은 실태조사의 명확성과 현실성을 감안해 2013년에 마련된 <농민권리선언> 내용을 참고로 작성됐다.

본 연구의 농민인권 실태조사는 크게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로 나누어 실시됐다. 먼저 설문조사표를 조사대상자에게 이메일 혹은 직접 전달해 작성하도록 했다. 그 후 설문조사표가 다 작성되면 개별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응답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고 농민인권 실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심층인터뷰는 응답자가 소재한 지역 또는 충남연구원 회의실에서 개별 혹은 2~3인 그룹 단위로 실시됐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❶ 인터뷰 대상 : 농민인권에 관심 있는 농민, 지역활동가, 교육자, 연구원 등 모두 12명
- ❷ 조사 기간 : 2016년 5월~6월
- ❸ 조사 내용 : 농민인권 세부 항목별 현재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농민인권에 관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
- ❹ 조사 방법 : 설문조사 실시 이후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인터뷰 실시

2.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1) 조사대상자의 기본 현황

본 연구에서 충남도 농민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모두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 [표 3-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명으로 같았다.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7명, 50대 1명, 60대 이상 2명으로 40대가 가장 많았다.²¹⁾ 직업별로는 농민이 가장 많았고 지역활동가, 교육자, 공무원, 연구원 등이었다. 농민 가운데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도 포함되었다. 거주지(직장)로는 홍성이 3명으로 많았고, 아산, 서산, 당진이 각각 2명이고 청양, 부여, 공주가 각각 1명이었다.

21) 조사대상 연령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농민인권 관련한 조사에서 편차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가급적 인권문제에 이해도가 높은 젊은 층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다.

[표 3-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 현황

응답자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직장)
①	강*주	남성	40대	농민, 교육자, 지역활동가	홍성
②	오 *	여성	40대	농민, 교육자	홍성
③	이*희	여성	40대	지역활동가	아산
④	박*우	남성	50대	농민	아산
⑤	한*훈	남성	30대	공무원	홍성
⑥	신*봉	여성	40대	농민	서산
⑦	전*배	남성	40대	농민	서산
⑧	신*연	여성	40대	농민	부여
⑨	임*빈	남성	60대	농민, 지역활동가	청양
⑩	김*봉	남성	60대	지역활동가	당진
⑪	한*숙	여성	40대	농민	당진
⑫	강*야	여성	40대	연구원	공주

2) 농민권

전체 12개 조항 권리 항목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인 <농민권>²²⁾에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조사결과, 5개 세부 항목 가운데 현재 평가 점수로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가 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똑같이 4.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량주권의 권리’가 가장 낮은 3.5점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가 3.8점으로

22) <농민권>은 원래 유엔인권이사회에 <농민권리선언>안에 ‘rights of peasants’로 표기되어 번역하면 ‘농민의 권리’ 혹은 ‘농민권’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농민의 권리’보다는 농민의 본질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농민권’으로 번역했다.

낮게 나타났다. 5개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를 보면, ‘식량주권의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9.1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농민권> 가운데 ‘식량주권의 권리’는 현재 5개 세부 권리 가운데 가장 취약하지만 향후 <농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식량주권의 권리’는 <농민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서 회복되어야 할 권리임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곡물 포함)이 24% 안팎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가장 큰 권리는 ‘농사권’²³⁾이다. 즉 농민은 국민의 부양할 수 있는 식량과 그 외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 개방이 시작되면서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국내 농업시장은 급속도로 위축해 농민의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민인권의 하락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상실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농민인권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식량주권의 회복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 <농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4.6	9.0
2.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4.5	9.1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5	9.1
4.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3.8	8.9
5. 식량주권의 권리	3.5	9.2

23) 한 응답자는 이를 ‘농부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부 인터뷰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홍성의 ①강*주는 “현재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특히, 4항과 5항이 그렇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여의 ③신*연은 “기본권인 만큼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식량주권을 헌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 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식량주권의 권리’가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식량주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식량주권은 농민만의 권리가 아니라 전체 시민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농민인권이 다른 인권에 비해 더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니듯 식량주권 또한 농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농민의 문제, 특히 식량주권의 문제는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의 인권과 식량주권에 관한 논의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식량주권의 문제는 전체 시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논의의 장이 농업계 내부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압튼 ‘식량주권의 권리’는 농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전체 시민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농민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 혹은 권리선언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눈여겨볼만한 권리는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이다. 이 권리에 대한 현재 평가 점수가 3.8점인 반면, 향후 중요도는 8.9점으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정부의 많은 정책들, 특히 토지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농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이다. 물론 현재 많은 정책과정에서 민간과의 협의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농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결국은 토지와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식 축사, 주민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에 해로운 산업시설, 정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도로와 인프라 건설의 정책과정에서 지역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이러한 시설의 입지가 주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결정 후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의 분노와 반발을 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홍성의 ②오 *는 “4번의 경우는 농민들이 몰라서, 누구도 안내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응답했다. 즉, 농민이 이러한 정보에 모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앞서 두 가지 권리와는 달리 눈여겨볼만한 권리로는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평가이다.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농민권리선언>에도 특히 강조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만큼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로 인한 인권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부 인터뷰에서 잘 나타났다.

당진의 ⑪한*숙은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만연하여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부녀회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음에도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여성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마을의 중요한 사항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성농민은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에서도 여성농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당진의 ⑩김*봉은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비단 전통 문화와 관습으로 인한 차별도 있겠지만 이는 제도권에서 이를 확장내지 고착화시켜 여성 스스로 이러한 문화에 젖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농촌의 여성농민에게 남성과 동등성과 국제인권법 하의 기본적 자유 권리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 향상은 물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여성 스스로 포기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은 교육에 있는 바, 특히 다수의 여성들이 새마을단체 등 보수단체에 가입해서 조직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물론 관변화된 여성조직의 성격으로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여성농민 혹은 지역의 여성조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성 혹은 여성조직을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서 평등한 시각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세부 정책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우리는 한편, 여성 스스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성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3-3] <농민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이다. 특히, 4항과 5항이 그렇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②오 *	농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며, 4번의 경우는 농민들이 몰라서, 누구도 안내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③이*희	사회 전반적인 인권 중에 특히 농민의 인권이 더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가령 5항의 ‘식량주권’의 권리가 농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전체 시민의 권리이듯이.
③신*연	기본권인 만큼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식량주권을 헌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헌 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⑨임*빈	현재 고령화된 농촌에서 여성과 남성의 권리에는 큰 차이가 있다.
⑩김*봉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농촌의 여성농민에게 남성과 동등성과 국제 인권법하의 기본적 자유 권리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향상은 물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여성 스스로 포기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은 교육에 있는 바, 특히 다수의 여성들이 새마을단체 등 보수단체에 가입해서 조직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⑪한*숙	여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만연하여 마을의 중요한 이들을 부녀회에서 앞장 서서 하고 있음에도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여성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마을의 중요한 사항에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강화를 위해 농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⑫강*아	농민은 현대에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 경제적 약자는 자동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약자로 취급받는 게 현실이다.

3)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농민의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는 모두 13개의 세부 항목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 13개 항목 가운데 현재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가 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 휴식 등을 누릴 권리’가 5.6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와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가 각각 5.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4개 항목은 다른 권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실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서 취약한 권리로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가 3.4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살충제,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각각 4.2점, ‘존엄하게 살 권리’가 4.9점으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가 8.9점, ‘존엄하게 살 권리’가 8.9점,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가 8.8점, ‘여성농민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권리가 향후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4]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 등을 받지 않을 권리	5.3	8.4
2. 존엄하게 살 권리	4.9	8.8
3.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	3.4	8.9
4. 건강하고 충족한 음식과 전통 음식 유지 권리	5.3	8.3
5.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가족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사용,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	5.3	8.6
6.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 휴식 등을 누릴 권리	5.6	8.3
7.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	5.8	8.2
8.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5.3	8.3
9.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5.5	8.5
10. 살충제,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4.2	8.5
11.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2	9.2
12. 여성농민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5.1	8.7
13.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	5.5	8.8

농민의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 대한 평가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권리는 무엇보다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였다. 다른 어떤 권리보다 농민의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가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농가의 소득하락은 이미 도농 소득격차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199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까지 이어진 쌀값 폭락으로 농민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더욱더 큰 문제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른 소득원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중소영세농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중소농의 생존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세부 인터뷰조사에서 홍성의 ①강*주의 응답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농민에게 ‘권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다.”고 응답했다. 농민에게 많은 권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존’의 차원에서 무엇보다 ‘소득’의 문제가 더 절실하다는 점이다. 같은 홍성의 ②오 *는 이처럼 농민의 소득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농민의 기본소득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면 생명권과 생활권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당진의 ⑩한*숙은 농가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시간의 노동에도 소득이 따라주지 않으므로 열악한 환경(살충제를 뿌린 농토)에서도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소득을 보장받는 정책이 뒷받침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에 해롭더라도 제초제를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농토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오늘날의 농업환경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환경의 문제도 어렵다는 점을 웅변하고 있다.

농민의 소득보장 다음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 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 등 이와 관련한 항목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여성농민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부 인터뷰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홍성의 ②오 *는 “농촌여성의 삶은 고단하다. 낮에는 일하고 끼니때가 되면

밥을 해야 하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돌봐야 하고...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거에서부터 기본적인 육아까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여성농민의 가정과 농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진의 ⑩김*봉은 “여성농민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고령농민인 여성농민들에게는 부족하다. 표준생활권에서도 고령의 여성들이 아직도 유교적 관습에 젖어있다.”고 평가했다. 여성농민 가운데 특히 고령의 여성들에게 존엄하게 살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여성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에서는 더욱 어려운 문제이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젖어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자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3-5]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농민에겐 ‘권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다.
②오 *	농촌여성의 삶은 고단하다. 낮에는 일하고 끼니때가 되면 밥을 해야 하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 돌봐야 하고...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거에서부터 기본적인 육아까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 농민의 기본소득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면 생명권과 생활권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다.
③이*희	2항. 농민으로서 자존심과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항. 적절한 소득은 농민보다 비정규직 저소득층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생명권, 기본권은 점점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④박*우	모두 중요한 문제라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 권리보다는 기본적인 권의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⑥신*봉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하나 특히, 심한 고령화로 인한 소득권, 교육권 등이 취약하다.
⑧신*연	지역적인 부분(농촌)에 관한 부분과 여성, 청년(소수자)에 대한 부분을 따로 분리했으면 한다.
⑩김*봉	여성농민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이 보호받아야 하지만 현재 고령농민인 여성농민들에게는 부족하다. 표준생활권에서도 고령의 여성들이 아직도 유교적 관습에 젖어있다.
⑪한*숙	장시간의 노동에도 소득이 따라주지 않으므로 열악한 환경(살충제를 뿌린 농토)에서도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받는 정책이 뒷받침되어 한다.
⑫강*야	생명을 생산하는 농민이 오히려 본인의 생명권에 위협받는 상황, 농민도 환경을 지금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

4)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농민에게 토지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토지가 없다면 농민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농지(토지)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현재 농민의 자경농지 비율은 50% 안팎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즉 농민의 농경지 절반 이상은 임차지라는 것이다. 이는 농지가 더 이상 농업소득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는 각종 개발과 사업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 앞서 설명한 식량주권의 토대는 농지를 보존하는 것일 텐데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농민의 기본권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는 모두 6개의 세부 권리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권리는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는 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많은 토지들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 이를 농민들이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가 각각 9.0점, 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는 현재에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는 현재에도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는 많은 농민과 지역주민이 지역의 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고 자신의 터전이 잃게 되어 이전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민은 농지와 자신의 터전을 잃더라도 정부는 소위 공시지가에 근거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 보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 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농지를 포함한 토지의 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농민 간의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개발행위 과정에서 정부의 정부 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행위에서의 정부의 밀실행정, 즉 정보의 비공개가 지역사회에서 갈등과 마찰의 시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 외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삼림과 어장을 보호받고 이익을 얻을 권리’,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는 모두 8.8점으로 같았다. 전체적으로 보아도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는 8.7~9.0점으로 6개 세부 권리 항목 간 편차가 크지 않았고 점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	5.9	9.0
2.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5.8	8.8
3.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	3.8	8.7
4. 삼림과 어장을 보호받고 이익을 얻을 권리	4.4	8.8
5. 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	4.5	8.9
6.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	4.6	8.8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인터뷰조사에서도 토지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홍성의 ①강*주는 “토지 독점이 심각하다. 토지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②오 *는 “무엇보다 농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고 파는 형태의 매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 국유지 혹은 지방(정부) 소유의 미경작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토지에 대한 독점이 심화되고 투기 또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한 헌법의 개정과 토지에 대한 투기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 소유의 미경작지에 대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아산의 ④박*우가 “소유보다는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토지에 대한 농민의 이용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주의 ⑫강*야가 “경자유전의 원칙(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 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법과 현실적 괴리가 너무 큰 만큼 향후 농민의 권리측면에서도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7]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토지 독점이 심각하다. 토지의 공공적 이용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②오 *	무엇보다 농민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고 파는 형태의 매매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 국유지 혹은 지방(정부) 소유의 미경작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
③이*희	농민에게 토지와 지역이 없으면 농업은 불가하므로 농민의 활동을 위한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
④박*우	소유보다는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권리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⑨임*빈	현재 농민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특례조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⑩김*봉	여성농민으로 토지소유와 경제활동은 자유로우나 지역에서 제공되는 각종 이익과 권한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⑪한*숙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 보니 여성이 혼자의 힘으로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책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⑫강*야	경자유전의 원칙(헌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 정상화를 위해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5)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은 토지 다음으로 중요한 영농수단 및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종자는 농업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농업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부는 굶어죽을지언정 종자는 남긴다.”고 할 정도로 종자를 생명처럼 여겼다. 이처럼 종자는 영농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종자주권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종자회사는 IMF 금융위기 때 대부분 외국의 다국적기업에 넘어갔다. 국내 종자회사가 외국회사에 넘어가면 국내 고유의 종자에 대한 권리도 외국 기업에 넘어가기 때문에 농민과 학계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내 종자회사를 장악한 다국적 종자회사는 이후 국내 시장을 공략했다. 기존의 국내 종자회사가 갖춰놓은 종자공급망과 종자보급체계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외국 종자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자에는 벼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외에서 들어온 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종자는 단순한 씨앗은 아니다. 종자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지식체계,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생명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산업화 체계가 들어오고 다국적 기업을 통해 외국의 종자가 들어오면서 국내 영농체계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담지해온 토종씨앗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산업화된 외국 종자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GM(유전자변형) 종자와 농산물이 도입되면서 농민과 시민단체에 의해 종자주권과 생명권에 대한 강한 저항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종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GSP(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고 민간 영역에서도 GMO 반대운동과 토종씨앗의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두 8개의 세부 권리 항목 가운데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5.5점, ‘농업, 어업,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도가 높은 권리 항목들은 대체로 영농과 기술을 선택할 권리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농민들이 농업 기술과 영농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농민의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가운데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은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가 3.8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가 각각 4.1점, 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공통적 특징은 산업화된, 현대화된 농업방식과 모델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방식이 이미 산업화 모델로 완전히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종사 분야에서 농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화 모델에서 종자는 대부분 종자회사, 특히 외국의 종자회사에서 구입한 종자를 사용해야만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농민이 자유롭게 종자를 선택하더라도 이는 농민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종자를 구입하기 때문에 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GM작물과 같이 우리나라 농업에서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다소 위험할지라도 소득 증대, 선택의 제한 등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작물을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8]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	4.1	8.8
2.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4.3	8.9
3.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	3.8	8.6
4.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4.0	8.9
5.농업, 어업,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	5.1	8.3
6.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	5.7	8.8
7.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	5.5	8.9
8.농민이 생산한 종자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4.8	8.7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를 보면,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가 모두 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GMO와 같이 건강과 생태에 위험한 작물을 거부하고 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와 ‘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모두 8.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의 종자선택권과 영농방식의 선택권이 향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요도 평가는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관한 세부 응답에서도 나타났다. 홍성에서 토종씨앗 보존 활동을 하는 ②오 *는 토종씨앗 보급 활동도 어렵지만 GMO 등이 잘못 전파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해 종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이 자가 채종을 해서 농사짓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전자조작 작물(GMO)의 꽃가루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데 막을 방법은 더 없는 게 현실이다. ‘종자주권’ 법을 만들어서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응답했다. 또한, 당진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⑪한*숙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고집하지만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아 마음만 있을 뿐이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표 3-9]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소농’ 에게는 웬만해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봐야한다.
②오 *	농민이 자가 채종을 해서 농사짓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전자조작작물(GMO)의 꽃가루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막을 방법은 더 없는 현실이다. ‘종자주권’ 법을 만들어서 우리 종자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③이*희	지금 농업이 종자,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측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다. 획일적 국가 정책보다 개인의 선택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권리도 높다고 생각한다.
④박*우	중요한 문제이나 시장이 가격과 소비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농업권의 한계를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⑨임*빈	종자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
⑩김*봉	대체적으로 권한은 있으나 의식의 결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⑪한*숙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고집하지만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아 마음만 있을 뿐이다. 향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⑫강*아	산업화가 심화되면서 농민의 선택권 여부와 의사결정에 관계없이 시대의 조류(FTA, 시장개방)에 휩쓸려 가버렸다.

6) 농업생산 수단의 보유권

농민이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생산수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영농환경에서 농업의 다양한 생산수단은 영농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수단이 갈수록 대형화, 첨단화, 고비용화 되어가면서 농민의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앙과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앙기와 콤바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농민이 이를 구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마을 내 일부 규모화된 농가에서 구입한 기계를 활용한다. 중소농이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와 농협 등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중소농들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농민의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에는 모두 5개의 세부 권리 항목이 있다. 이들 권리에 대한 평가 결과,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 등 수리권’이 5.4점, ‘농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민은 상대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가 보장되고 관개 및 수리권도 있고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	5.5	8.5
2.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의 생산 도구와 기술을 습득할 권리	4.8	8.4
3.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 등 수리권	5.4	8.5
4. 농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	5.1	8.3
5.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	3.7	9.0

반면,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는 3.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민은 생산수단에 대한 접근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이를 결정하는 정책 과정에서는 거의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즉, 5개 항목 가운데 ‘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가 향후 가장 중요한 권리로 평가했다. 농정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의 과정에서 농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향후 숙제가 될 것이다. 다행히 충남도와 몇몇 시·군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농업회의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논의의 기구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세부 인터뷰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생산수단 보유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지자체 혹은 농협에서 이러한 일을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의 ①강*주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의 수단 역시 공공적 활용이 필요하다. 농협이 이 역할을 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만만 아니라 농업생산수단의 공적 활용이 필요하고 농협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의 ②오 *와 아산의 ③이*희, 당진의 ⑪한*숙 등 주로 여성농민이 농업생산수단의 고가격으로 청년, 귀농자, 여성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의 ②오 *는 “농사에 필요한 도구나 기계 등을 누구나 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역농협 등에서 임대하는 형태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는 것도 문제이다. 건조, 저장, 가공시설도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했다. 아산의 ③이*희는 “생산수단은 자본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누구에게나 권리 자체는 보장되지만 자본력이 없는 귀농자, 청년에게는 별로 소용없는 권리일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자본력이 없는 농민들에게는 생산수단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제기했다. 당진의 ⑪한*숙는 특히 여성농민들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대여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농업예산의 계획단계부터 여성농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공주의 ⑫강*야는 농업생산수단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업생산 수단(자본)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부분보다 나은 편이다. 다만,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 중 노동의 종속화의 심화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미 상실했다.”고 응답했다. 농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런데 그는

노동의 종속화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도 크게 상실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의 절반 이상은 임차농지이다. 이는 해방 후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추진할 때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산수단인 토지의 상실은 향후 농업문제 논의에서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표 3-11] <농업 생산수단의 보유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토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의 수단 역시 공공적 활용이 필요하다. 농협이 이 역할을 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②오 *	농사에 필요한 도구나 기계 등을 누구나 다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역농협 등에서 임대하는 형태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는 것도 문제이다. 건조, 저장, 가공시설도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에서 세우는 농업예산, 계획, 집행, 적용 등은 아래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래서부터 진짜 필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에 쓰이면 좋겠다.
③이*희	생산수단은 자본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누구에게가 권리 자체는 보장되지만 자본력이 없는 귀농자, 청년에게는 별로 없는 권리일 수도 있다.
④박*우	노동권과 생산의 자기 결정권 등의 문제는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⑤신*연	생산수단의 보유와 참여, 이용이 혼합되어 있다.
⑩김*봉	농업생산수단에서 자주적 의지의 문제이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없다.
⑪한*숙	고가의 영농기계들을 구비하기 어렵고 대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농업예산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여성농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⑫강*야	농업생산 수단(자본)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부분보다 나은 편이다. 다만,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 중 노동의 종속화 심화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이미 상실했다.

7) 정보 획득권

농민이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먼저, 농사에 관한 기술정보는 필수이다. 자신이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단계별 필요한 재배기술을 알아야만 농사가 가능하다. 또한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격정보가 필요하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농민의 생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그 경로에 따라 판매가격의 편차도 심한 상태에서 농민이 적합한 가격의 판매처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간상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농사기술정보와 가격정보 못지않게 정책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의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농촌마을의 농민까지 전달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2017년도에 처음 실시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²⁴⁾도 일선 농촌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규정도 다소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²⁵⁾

농민의 <정보 획득권>에 대한 조사 결과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4.8점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4.5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낮은 수준이지만 농민의 생산과 소비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 획득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는 4.0점으로 가장 낮았다. 농민들은 토종씨앗과 같은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얻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두 개의 권리 항목은 8.8점으로 동일했다.

24) 충남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2만㎡ 미만 농어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 가구다. 그러나 농업 이외 소득이 연간 2,200만 원 이상인 농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연간 15만 원(자부담 3만 원)이며, 전체적으로 4만 2,570명, 64억 원이다. 해당 여성 농어업인은 카드 발급을 통해 건강관리 활동이나 의료기기·용품 구입, 영화·공연·전시 관람, 관광, 도서 구입, 목욕탕·이용원·산후조리원 이용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여성 농어업인은 전체 농가 인구 32만 7,000명 중 17만 명으로 52%를 차지한다.(농업정책과 2017년 2월 발표 자료)

25) 2017년 처음 실시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조건은 낮추어 2차 신청을 실시했다.

[표 3-12] <정보 획득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4.5	9.2
2.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4.8	8.8
3.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4.0	8.8

농민의 <정보 획득권>에 관한 세부 인터뷰조사 결과, 농촌은 구조적으로 정보 획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보의 적절한 전달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홍성의 ②오 *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시골로 갈수록 더 그렇다. 물론 농민들이 스스로 찾아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농민이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부여의 ⑧신*연은 정보 전달의 불균형성으로 인한 불균형 혜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다보니 몇몇이 공유하고 혜택을 누리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응답했다. 농촌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이뤄지는 많은 사업들이 지역의 공무원과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정보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표 3-13] <정보획득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정보 획득과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②오 *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시골로 갈수록 더 그렇다. 물론 농민들이 스스로 찾아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
③이*희	농업 관련 정보는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사되고 공유해야 좋을 것 같다. 문제는 무엇이 '농업관련 정보' 인지를 잘 모르거나 광범위한 것이다.
④박*우	농촌지역의 정보 획득의 기회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⑤신*연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다보니 몇몇이 공유하고 혜택을 누리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정보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든다.
⑩김*봉	여성농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⑪한*숙	정보를 찾아다니기보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⑫강*아	정보인프라가 낮은 농촌지역의 한계로 인해 접근성이 취약하다. 농민의 인적자본이 낮으므로 정보 습득력 향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8)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농민의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농민이 자신이 애써 가꾼 농산물에 대한 시장 결정권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1차 생산물을 중간상인 혹은 중간대리상을 통해 판매하게 된다. 그래서 최종가격은 도시의 판매상들이 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산물의 가격은 최종적으로 몇 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지만 농가에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농민들은 가격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격협상력을 높이는가 하면 로컬푸드 직판장을 통해 농가의 가격결정력과 높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루트를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은 여전히 일부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간상인 혹은 중간 도매법인을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가격결정권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농민의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 대한 평가 결과,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득하고 저장할 권리’가 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역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가 5.0점으로 나타났다. 즉, 농산물에 대한 저장과 지역 내 판매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는 각각 3.2점, 3.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와 ‘수확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3.7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식량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가 3.8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민들이 느끼기에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은 노동활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 요구 충족의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요도 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가 9.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9.4점으로 뒤를 이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 획득,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에 대한 갈망이 크고 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득하고 저장할 권리	5.4	8.5
2. 지역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	5.0	8.8
3.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	3.4	9.2
4.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	3.2	9.5
5.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	3.7	9.4
6. 수확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	3.7	9.3
7. 식량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	3.8	9.2

농민의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 대한 세부 인터뷰 조사에서도 농민의 가격결정권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했다. 홍성의 ❶강*주는 “이 항목에서는 농민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고 판단된다. 최악의 상태이다.”고 평가했다. 가격결정권에 대해 농민은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수입 개방의 영향이 크다. 당진의 ❷한*숙은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에서 가격결정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 없다.”고 했다.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민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❸강*아가 “산업화의 논리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결정권이 전무하다. 모두 시장기능에 위임해 버린 상황이다.”고 말한 것처럼 산업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가치 등 모든 가치 영역을 시장 기능에 맡겨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 들어와서는 이러한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사회적 가치체계를 활용한 유통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로컬푸드 직판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홍성의 ❹오*는 “농산물 가격은 국가정책(FTA)과도 관계가 있다. 최근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는 가격을 생산자가 정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유롭게 판매, 유통되도록 하면 좋겠다. 인증제도의 재검토, 임금의 남녀 차별 등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기관에서 만든 인증제도에 좀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고 임금에서의 남녀 차별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아산의 ❺이*희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시장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시장 결정권은 시장에 맡겨진다. 그래서 대안시장을 만들어 내고,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과 학교급식 등을 통해 지역 단위에서 대안적 유통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이 항목에서는 농민에게 어떤 권리도 없다고 판단된다. 최악의 상태이다.
②오 *	농산물 가격은 국가정책(FTA)과도 관계가 있다. 최근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는 가격을 생산자가 정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유롭게 판매, 유통되도록 하면 좋겠다. 인증제도의 재검토, 임금의 남녀 차별 등도 해결이 필요하다.
③이*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시장 결정권은 시장에 맡겨진다. 그래서 대안시장을 만들어 내고,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박*우	지역 내 생산과 판매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해 보인다. 생산물의 가격 결정은 생산-소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⑩김*봉	여성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결정권한 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특히 여성노동권과 생활임금 쟁취가 요구된다.
⑪한*숙	수입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시장에서 가격결정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 없다.
⑫강*야	산업화의 논리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한 결정권이 전무하다. 모두 시장기능에 위임해 버린 상황이다.

9) 농업 가치의 보호권

농업은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농업은 그야말로 농민의 온전한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사는 다양한 문화와 세시풍습과 연관되어 있다. 정월보름에 한 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달집을 태우고 탑돌이를 하기도 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과 수확기 때는 품앗이와 두레를 통해 이웃의 농사일을 도왔다. 그리고 추수를 마치면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제를 올렸다. 그해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조상에게 바치고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먹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농업의 가치와 연결된다.

하지만 농업이 산업화, 규모화, 첨단화되고 농촌주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감소와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농업의 문화와 가치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손실은 비단 농민만의 손실이 아니라 수천 년 간 이어져온 우리의 전통문화의 소멸을 의미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각 지자체와 농촌주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이러한 농업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농촌의 과소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농민의 <농업 가치의 보호권>에 대한 평가 결과,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가 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가 4.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지역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와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는 각각 3.3점, 3.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많은 개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도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4개 권리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가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민에게는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향후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농보다는 기업농의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농지를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든다든가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한 개방의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가치 보호를 내팽개치는 행위는 막아내야 할 권리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가 9.0점으로 높았다. 농업의 가치 파괴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역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6] <농업 가치의 보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	4.5	9.0
2. 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	4.6	8.6
3. 농업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	3.3	9.3
4. 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	3.6	8.9

농민의 <농업 가치의 보호권>에 관한 인터뷰조사에서 농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산의 ③이*희는 “농업의 가치는 점점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농업, 농민의 문제는 ‘농업의 가치’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오늘날 농업의 가치가 많이 추락했지만 농업과 농민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④박*우는 “농업이 생산하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는 일종의 공유재이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고 했다. 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이 생산하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는 공공재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유럽은 이미 농업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산업적 마인드로 농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성과 공동체성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성의 ①강*주가 “그럴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던 것처럼 정부도 농민도 농업의 가치를 지킬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인지도 모른다.

[표 3-17] <농업 가치의 보호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그럴 여유가 없다.
②오 *	농민들의 생각이 지역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면장 정도는 지역민들의 선거를 통해 지역사람이 선출이 되면 좋겠다. 농촌 여기저기에 무자비하게 세워지는 축산건물과 공장들을 허가하기 전에 지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리는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장들이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③이*희	농업의 가치는 점점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농업, 농민의 문제는 ‘농업의 가치’ 문제라고 생각한다.
④박*우	농업이 생산하는 문화와 정신의 가치는 일종의 공유재이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⑩김*봉	전반적으로 농업의 가치 인식이 부족해 자주적 농민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요구된다.
⑪한*숙	농민의 철학적 정신과 가치, 정체성 등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농업의 가치는 농민이 좀 더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당진의 ⑩김*봉은 “전반적으로 농업의 가치 인식이 부족해 자주적 농민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농민이 농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확고히 할 때 농업의 가치는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하는 상황에서 농업적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친환경과 유기농업을 통해 농업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당진의 ❶한*숙이 “농민의 철학적 정신과 가치, 정체성 등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응답한 것처럼 현실에서 농민은 이상과 현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농업환경 사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 생물다양성 수호권

농업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농업은 전통적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복원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산업화, 규모화,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에서의 생물다양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작화, 상업화, 조작화만 남아있다. 특히 미국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생물다양성을 말살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이 생물다양성이다. 농업직불금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생물다양성의 가치 제고이다.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막는 또 다른 장벽 중의 하나가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이다. 초국가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해 제정된 많은 제도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종자에 관한 규제 협약에 따라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종자를 판매하지 못한다. 토종씨앗을 포함해 자신이 생산한 다양한 종자를 판매해 생물다양성을 높이하고자 해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 그래서 토종씨앗은 농민들 간에 나눔행사를 통해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종자협약은 농민으로부터 종자주권을 빼앗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종자는 농민의 손에 의해 수천 년 간 보호, 전승되어 왔는데 현재 종자는 종자기업, 그것도 다국적 기업에 의해 판매되는 종자를 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종자뿐만 아니라 규제적 인증제 또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말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의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GAP, HACCP제도는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특히 HACCP 인증을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농가는 별로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는 농업과 가공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농가당 평균 1.5ha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인

증 자체가 맞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규격에 의해 가공된 농산물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기 위한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농민의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평가 결과 대부분의 권리 항목은 낮게 나왔다. 전체 4개의 세부 권리 항목 가운데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만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항목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가 3.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 역시 다국적기업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GM작물과 GM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GMO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내포신도시에서 발생한 LMO 유채 식재는 지역 내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다. 정부의 검역기능이 허술해 발생하는 GM종자와 생물체의 유입으로 인해 유전자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가면서 농민들의 반감과 경계심은 높아가고 있다. 나머지 권리 항목인 ‘농민공동체 소유의 상품, 서비스, 자원,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 또한 3.3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수호권>에 대한 권리 수준은 낮지만 이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4개 세부 권리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에 대해 농민들은 앞으로도 강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권리항목도 모두 9.0점 이상의 중요도를 보여줬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는 9.2점으로 높은 중요도 수준을 보였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도 9.1점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18]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	3.5	9.2
2.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	3.0	9.1
3. 농민공동체 소유의 상품, 서비스, 자원,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	3.3	9.0
4.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	2.8	9.3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뷰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홍성의 ②오 *는 “국가단위에서 움직이는 인증제도와 특허, 지적재산권 등은 농민의 힘으로 막기란 쉽지 않다. 너무 비싼 인증제도가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응답했다. 초국가적 기업이든 국가든 인증제도 자체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부하기란 거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증을 위해 농민들은 많은 자금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여의 ③신*연, 당진의 ⑩김*봉, 공주의 ⑫강*야는 생물다양성 수호에 대한 인식이 사실 지금은 낮지만 향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 3-19] <생물다양성 수호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권리를 행사할 힘이 너무 약하다.
②오 *	국가단위에서 움직이는 인증제도와 특허, 지적재산권 등은 농민의 힘으로 막기란 쉽지 않다. 너무 비싼 인증제도가 농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농업학교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다. 농업학교의 부활과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③이*희	농업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좋은 방법이다. 상업농, 단작이 아닌 다양한 농업이 있을 때 더욱 잘 지켜질 것이다.
④박*우	다양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먹거리의 지나친 상품화와 독점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⑤한*훈	유전자조작식품 등에 대한 우려가 높다.
⑧신*연	지금은 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항목이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다.
⑩김*봉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⑫강*아	전반적으로 생물다양성 수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11) 환경 보존권

농민들은 지역에서 살면서 이웃과 함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사일 하나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싸워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이다. 현재 농촌에는 각종 개발과 유해 환경시설의 입지로 인해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 건설과 산업단지의 입지로 인해 농민의 영농활동은 위축되어 가고 있다. 또한 개별 입지로 농촌 구석구석으로 들어온 기업들 가운데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또한 공장형 축산시설들의 입지로 수질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의 입지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진행되다가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되어서나 공개되어 주민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농민의 기본권>과 <정보 획득권>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했듯이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 과정, 특히 개발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농민의 환경 보존권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도로 건설, 산업시설의 입지, 공장식 축산시설의 입지 등 농민들의 영농활동과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사업일수록 농촌주민들에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농민의 <환경 보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권도 쉽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농민의 <환경 보존권>에는 모두 5개의 권리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토지 처분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가 4.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을 뿐 나머지는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 가운데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환경피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 내용과 정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개인이나 지역주민이 큰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환경피해를 입증하고 보상을 청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시민단체 혹은 공적 영역에서 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²⁶⁾ 보상에 대한 청구권 다음으로는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3.3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환경 파괴로 인한 모든 형태의 착취에 대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환경 보존권>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 결과 역시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농민들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민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모두 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되는 권리는 ‘농민의 지식에 따라

26) 청양군 강정리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강정리 주민은 인근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로 오랜 동안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대항해 왔다. 직접 항의도 하고 행정기관에 호소도 했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강정리사태는 시민단체가 지원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시민단체가 강정리 주민을 대신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청양군과 충남도에 제안했다. 특히 충남도는 시민단체의 안을 받아들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입장 등이 달라 행정기관의 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시 행정기관을 찾아 항의했고 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주민들과 함께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최근 충남도도 강정리사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암튼 청양군 강정리사태는 농민의 <환경 보존권> 차원에서 깊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을 보존할 권리'이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과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농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환경의 보존도 향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20] <환경 보존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4.3	9.5
2. 농민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	4.2	9.3
3.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	3.3	9.3
4.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	3.2	9.3
5. 토지 처분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4.8	8.9

농민의 <환경 보존권>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환경 보존은 중요한 문제이나 농촌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아산의 ④박*우는 “중요한 문제이나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홍성의 ①강*주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홍성의 ②오 *는 “농민이든 누구든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결해 나가는데 너무나 큰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토지처분 보상도 마찬가지다. ‘농민변호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부 농촌마을에서 마을변호사제를 통한 마을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농촌 환경 보존권과 같은,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소송을 지원하는 마을변호사는 거의 없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환경 보존권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농민의 환경 보존권의 행정의 역할이 우선 중요하다. 각종 개발과 허가는 대부분 행정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민과 지역주민 간 협력은 필수적이고 이에 관한 정보도 최대한 공유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민과 지역주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민과 지역주민이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각종 환경침해 사례는 빈발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농민과 지역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예산과 홍성, 부여 등에서 환경운동 관련 단체가 성립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의 ⑩김*봉이 “농민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지역의 환경 보존은 농민과 지역주민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표 3-21] <환경 보존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그럴 여유가 없다.
②오 *	농민이든 누구든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결해 나가는데 너무나 큰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 토지처분 보상도 마찬가지다. ‘농민번호사’가 있으면 어떨까?
③이*희	환경보호권은 농민과 시민들의 복지에 직결되기도 한다. 농촌환경 파괴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훼손)의 문제이다.
④박*우	중요한 문제이나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
⑩김*봉	농민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⑫강*야	전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12) 결사, 의견, 표현권

농민들에게도 농민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해 결사권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 독재와 군사정권 시기 관제에 의한 농민조직이 조직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농민 자신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조적인 조직은 민주화 시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많은 농민조직이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탄생했고 정부의 각종 농업, 농촌, 농민 정책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왔다.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반대성명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적 항의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농민단체, 특히 민주화 시기 조직된 농민단체의 경우 정부와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많은 농민단체 대표들은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고 관련 단체 역시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이어져 정부는 농민단체를 협력의 대상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민들의 시위가 어떤 경우에는 과격 양상을 보이기도 해서 정부는 농민단체의 시위를 늘 경계했다.

비근한 예로,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는 쌀값폭락 등 농정실패에 항의하는 농민들과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쏘았고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 농민은 쓰러졌다. 그리고 병원 입원 1년 후 그는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숨기다가 결국 정권이 바뀐 후 실토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 겨울, 쌀값폭락과 국정농단에 항의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전북준투쟁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부당한 제지였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암튼 농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위압과 경계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²⁷⁾

농민의 <결사, 의견, 표현권>는 다음과 같이 모두 5개의 권리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자신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 예술로 표현할 권리’가 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억압에 저항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가 각각 4.9점, 4.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농민은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단체에 가입하고 호소할 권리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권리 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전히 농민의 권리 요구 활동이 농민 스스로도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사, 의견, 표현권>의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모두 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민의 권익과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조직을 결사하고 참여할 권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권리 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가 8.7점으로 높았다. 농민시위에 대해 지역에서는 늘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농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계와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27)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트랙터·화물차량을 몰고 서울 도심 집회 장소로 이동하던 농민단체를 막은 경찰의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전농은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려고 화물 차량·트랙터 등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이 경기 안성요금소와 서울 양재나들목,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차량을 차단해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중략)인권위는 △인권 친화적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집회·시위 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주최 쪽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권고했다.(한겨레 2017년 7월 28일자 보도내용)

[표 3-22] <결사, 의견, 표현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결사의 자유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	4.3	8.9
2.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4.9	8.9
3. 자신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 예술로 표현할 권리	5.5	8.3
4. 자신의 권리 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	4.3	8.7
5. 억압에 저항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	4.8	8.6

농민의 <결사, 의견, 표현권>에 관한 세부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농민들의 결사와 의사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아산의 ③이*희는 “결사, 의견, 표현권은 정치의 문제와 같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따라 농민인권의 보호, 보장 문제도 연동될 것 같다.”고 말했고, ④박*우는 “농민의 권리의식과 자신의 불이익을 표현할 권리는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공주의 ⑫강*야도 “정부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다소 억압받는 수준이 다르나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 의거해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농민이 불이익을 당할 때 이를 표현할 제도적 장치는 보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들의 이러한 활동이 결과적으로 이뤘다할 성과를 얻지 못해 무력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많았다. 홍성의 ①강*주는 “결사를 하나 결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무기력하다.”고 응답했다. 많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농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많은 조직 활동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당진의 ⑪한*숙은 권리 투쟁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투쟁과정에 지역적인 혈연, 지연 관계를 타파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농민이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개선해 주도록 행정관청 등에 요구해도 해결과정에서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요소들이 작용해 해결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⑪한*숙의 응답은 그가 귀농자로서 겪은 경험에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외부인을 경계시키는 좁은 지역사회

내 폐쇄적 행정체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에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행정기관 및 각급 공공기관은 가급적 외부인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표 3-23] <결사, 의견, 표현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결사를 하나 결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무기력하다.
②오 *	농민들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농민의 기본소득이 절실히 필요하다.
③이*희	결사, 의견, 표현권은 정치의 문제와 같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따라 농민인권의 보호, 보장 문제도 연동될 것 같다.
④박*우	농민의 권리의식과 자신의 불이익을 표현할 권리는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⑩김*봉	여성농민회,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와 저항할 권리가 있으나 민주적 의식이 부족하다.
⑪한*숙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투쟁과정에 지역적인 혈연, 지연 관계를 타파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⑫강*아	정부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다소 억압받는 수준이 다르나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의거해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13) 정의에 대한 접근권

농민의 권리 가운데 마지막 권리는 정의에 대한 접근권이다. 이는 농민이 영농활동 혹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권리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 법률적 지원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권리이다. 앞서 <환경 보존권>에서 설명했듯이 농민은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도 많고, 환경유해시설과 산업시설의 입지로 인해 영농 활동과 건강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장형 축사의 입지로 수질악화와 악취로 건강과 주거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과정에서도 종종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 불량종자 구입으로 인한 피해, 중간유통상의 ‘갑질’로 인한 피해, 풍수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농기계의 운전과 조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 등 그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피해 사례에서 농민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농민이 그 피해에 대해 정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를 감수하면서 진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자신이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해도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정의에 대한 농민의 접근권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민의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은 두 가지이다. 조사 결과 두 권리 항목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두 권리 항목 가운데 첫 번째인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는 3.8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는 4.3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도 각각 8.8점과 8.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권리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24] <정의에 대한 접근권>의 실태 및 향후 중요도 평가

세부 권리 내용	현재 평가 점수 (0-10점)	향후 중요도 점수 (0-10점)
1.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	3.8	8.8
2.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4.3	8.7

농민의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인터뷰조사에서는 농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산의 ③이*희는 “농민과 농민단체가 억울할 때 지원·구제해주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④박*우는 “정의에 대한 접근의 권리는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응답했다. 홍성의 ②오 *는 구체적으로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을 것 같다. ‘농민자문위원’들이 면사무소마다 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주었다. 면사무소에 농민들의 부당한 사례를 논의하고 자문해 주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공주의 ⑫강*야는 “농민들이 정의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좀 더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농민에 대한 권리 침해가 외부로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각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표 3-25]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세부 응답 내용

응답자	세부 응답 내용
①강*주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②오 *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농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을 것 같다. ‘농민자문위원’ 등이 면사무소마다 있으면 어떨까?
③이*희	농민과 농민단체가 억울할 때 지원·구제해주는 곳이 꼭 필요하다.
④박*우	정의에 대한 접근의 권리는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⑩김*봉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없다.
⑪한*숙	관공서의 직원과 일반인과의 혈연, 지연 관계가 법률의 집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⑫강*아	자신이 가진 권리와 의무 등 사회생활에서 정의 부분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 현실이다.

3. 종합 평가

앞선 분석에서는 12항목의 농민권리에 대한 세부 권리 항목별 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12개 항목 전체에 대한 현재 평가 점수와 향후 중요도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에 관한 12개 권리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항목은 생물다양성 수호권이 3.2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농업가치의 보호권, 환경 보호권이 모두 4.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권리 항목은 현재 충남도 농민권리의 보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등은 각각 5.0점, 4.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농민인권 실태 및 향후 중요도 점수 종합

항목	평가		
	현재 평가 점수	향후 중요도 점수	차이
① 농민권	4.2	9.1	4.9
②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5.0	8.6	3.6
③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4.8	8.8	4.0
④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4.7	8.7	4.0
⑤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4.9	8.5	3.6
⑥ 정보 획득권	4.4	8.9	4.5
⑦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4.0	9.1	5.1
⑧ 농업가치의 보호권	4.0	9.0	5.0
⑨ 생물다양성 수호권	3.2	9.2	6.0
⑩ 환경 보호권	4.0	9.3	5.3
⑪ 결사, 의견, 표현권	4.8	8.7	3.9
⑫ 정의에 대한 접근권	4.1	8.8	4.7

둘째, 12개 권리 항목에 대한 향후 중요도 평가에서 환경 보호권이 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 농민은 향후 환경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 수호권 9.2점, 농민의 기본권과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이 동등하게 9.1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도 농민은 앞으로 이들 중요도가 높은 권리에 좀 더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민인권에 대한 현재와 향후 중요도 점수 간 차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농민인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점수가 낮는데 향후 중요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해당 권리 보장 수준이 낮으나 향후 이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현재 평가와 향후 중요도 간 차이는 생물다양성 수호권이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환경 보호권이 5.3점,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이 5.1점, 농업가치의 보호권이 5.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 수호권이 현실과 향후 중요도 간 차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세부 권리 항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권의 세부 권리 항목의 현재와 향후 중요도 차이를 보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가 6.1점,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가 6.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GMO와 같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HACCP 등 초국가적 기업(단체) 등에서 만든 인증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충남도 농민인권 보호 수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 향후 충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주요 농민권리 실태 분석

앞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초안을 토대로 12개 농민의 권리에 관한 현재 수준, 향후 중요도,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자 의견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나아가 농민권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 권리, 즉 **토지 보호권**, **환경 보존권**, **소득 보장권**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권리는 2014년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농민패널의 의견과 이번 농민인권 실태조사 과정에서 농민들, 지역활동가, 연구자 등과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권리이다.

1. 토지 보호권

토지 보호권은 유엔농민권리선언 초안의 세 번째 권리인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듯이 농민에게 농지는 절대적인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토지는 농민의 생존 기반이자 우리 역사와 문화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농촌에서는 임차농이 증가하고 임차농지 또한 증가해 실질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농지소유문제에 대해 인터뷰대상자들 또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전체 12명의 응답자 가운데 6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5명은 ‘심각한 편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1명이고, ‘양호한 편이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12명 가운데 11명은 현재의 농지소유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표 4-1] 현재 농지소유 문제의 심각성

항목	빈도
① 매우 심각하다	1278102
② 심각한 편이다.	345611
③ 보통이다.	9
④ 양호한 편이다.	-
⑤ 아주 양호한 편이다.	-

현재와 같은 농지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차료 인하, 농민에 대한 농지 매입자금 확대,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가중 과세, 농지규제 강화, 기타 등이다. 이와 같은 해결 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은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가중 과세’를 지목했다. 모두 4명의 응답자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표 4-2] 농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항목	빈도	이유
①임차료 인하	-	-
② 농민에 대한 농지 매입자 금 지원 확대	③④	③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토지개혁 같은 혁신적인 해결법이 없이는 현재의 토지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③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가중 과세	⑥⑦ ⑨⑪	⑥농지는 투기의 목적으로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지켜지길 바란다. ⑦농지법에 대한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몰수해야 한다. ⑨농지구입 시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농사만 지으면 자격요건에 치우치는 실정이다. 실질적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⑪부재지주가 직불금까지 받아 챙기는 농지가 여전히 허다하다.
④농지규제 강화	③⑤ ⑫	⑤부재지주의 문제가 많다. 농지는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⑫농지매매 제한 기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재지주 농지를 전수조사해 국가가 환수해 농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⑤ 기타	①② ⑧⑩	①농지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경작권은 농민에게 줘야한다. 농지의 ‘공유화’가 급선무이다. ②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려고 할 때 너무 비싸다. 공유지(국가, 지역)를 농민에게 무상, 영구임대 또는 귀농청년들에게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농장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 ⑧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필요하나 여러 가지로 악용되어 결국 피해보는 건 농민이다. 농지규제를 강화해도 어떤 식으로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 ⑩토지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어 농촌이 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속히 정부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민들에게 장기저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토지분배를 시행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서산의 ⑥신*봉은 “농지는 투기의 목적으로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지켜지길 바란다.”고 응답했고, 같은 서산의 ⑦전*배는 “농지법에 대한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몰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농지법에 근거해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 목적 등으로 매매된 농지는 몰수 등의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청양의 ⑨임*빈이 “농지구입 시 농지취득 자격이 있어야 함에도 농사만 지으면 자격요건에 치우치는 실정이다. 실질적 농민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농지는 실질적 농민이 소유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농지규제 강화’였다. 여기에는 3명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산의 ⑤한*훈은 “부채지주의 문제가 많다. 농지는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공주의 ⑫강*야는 “농지매매 제한 기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채지주 농지를 전수 조사해서 국가가 이를 환수해 농민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규정에 어긋난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환수와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응답은 ‘농민에 대한 농지매입자금 지원 확대’였다. 2명의 응답자가 여기에 동의했다. 그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보면, 아산의 ③이*희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같은 아산의 ④박*우는 “토지개혁 같은 혁신적인 해결법이 없이는 현재의 토지 문제는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응답했다. 현재와 같이 농지가 없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구조에서 농사에 진입하는 사람, 특히 청년층에게 정부차원에서 농지 제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토지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농민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기타 의견도 많았다. 그 주요 내용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필요하고 그 기본적 원칙은 토지의 공공성, 토지공개념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성의 ①강*주는 “농지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경작권은 농민에게 줘야한다. 농지의 ‘공공화’가 급선무이다.”라고 응답했고, 부여의 ⑧신*연은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필요하나 여러 가지로 악용되어 결국 피해보는 건 농민이다. 농지규제를 강화해도 어떤 식으로든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토지공개념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토지개혁은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농업의 후속세대를 위해서도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성의 ②오*는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려고 할 때 너무 비싸다. 공유지(국가, 지역)를 농민에게 무상, 영구임대 또는 귀농청년들에게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농장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진의 ⑩김*봉은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어 농촌이 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속히 정부가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민들에게 장기 저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토지분배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토지에 대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해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층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 농촌고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개혁은 현재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향후 토지개혁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 농지의 주인은 농민임을 다시 한 번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지만 후속세대들이 좀 더 쉽게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현재 과소·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헌법 개정을 통한 토지개혁 논의와 아울러 현실적 차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및 농촌주거지역 잠식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의 잠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개발 계획 결정과정에서 농민의 참여’를 꼽았고, 두 번째, ‘투표와 같은 지역주민의 승인’을 꼽았다. 사실 지역 내 개발행위 과정에서 농민이 참여하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제도적 보장은 차지고서라도 정보공개도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은 개발행위가 거의 결정되는 순간 혹은 결정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표 4-3]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잠식을 막기 위한 방안

항목	빈도
① 개발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247
② 대체농지의 철저한 확보	267
③ 개발 계획 결정과정에서 농민의 참여	2357810
④ 지역주민의 승인(투표 등)	23791
⑤ 기타	1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단지가 많은 부여군에서 최근 발생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 시위가 그렇다. 주민들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대해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결정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업이 발표되어 지역주민들, 특히 이 지역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부여군 열병합발전소 반대 결의대회…군민 1천여 명 운집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부여군청 앞 연이어 집회



부여군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백제뉴스

[그림 4-1] 부여군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 모습

(출처: 백제신문 2016년 8월 22일자 보도 내용)

다행히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부여군은 해당사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이후 해당업체는 다시 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사업이 다시 부여군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지역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²⁸⁾

현재 부여군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환경차원에서나 생존권 차원에서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계와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충남인권센터 내 인권보호관(농민인권보호관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 필요)의 참여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환경 보존권

환경권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살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기도 어렵지만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²⁹⁾ 충남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석면 광산터의 건설폐기물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다.

청양군 강정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석면의 원료인 사문석 채취를 위한 광산으로 개발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 석면안전법이 제정된 뒤 강정리의 사문석 채취는 멈췄다. 하지만 강정리 주민의 석면 공포는 계속 되고 있다. 2001년 강정리 광산터에 자리잡은 건설폐기물장이 여전히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석면 광산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주민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폐광이 되더라도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물질들이 주민들의 주거지와 경작지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복토 등 뒤처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시설이다. 그런데 이곳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 가동 중이니 주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1년 강정리 사문석 광산 조사에서 1.5% 농도의 석면(트레몰라이트)

28) 산자부는 지난해 8월 26일 홍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지역 수용성 등을 문제 삼아 (주)홍원에너지의 허가서류 일체를 반려시켰지만,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찬반 대립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중도일보 2017년 1월 25일자 15면 보도 내용)

29) 이는 앞서 농민의 12가지 권리 가운데 <환경 보존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광산 반경 2km 안에 사는 주민 11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 받았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 2013년 강정리 주민들이 주변 마을까지 주민 500여명을 직접 찾아가 확인했더니 폐암으로 숨진 사람만 35명이었다.³⁰⁾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이자 생명권 침해이다. 이처럼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청양군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충남도는 청양군에 그 책임을 떠넘긴다면 이는 충남도가 인권침해를 방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충남도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일명 “강정리특위”)가 권고한 내용을 일부 수용해 청양군에 폐기물업체 불법매립 등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산지복구 지도권 행사는 빠져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석면피해 고통...“안희정 지사님 우리 좀 살려줘유”



충남 청양 강정리에 사는 김길수(72) 할머니가 집 앞 밭에 앉아 석면 광산 터에 들어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바라보고 있다. 김 할머니 집 근처의 업체 부지 경계선 언덕에 가림막이 세워져 있다.

[그림 4-2] 청양군 강정리 주민의 석면피해 관련 보도 자료

(출처: 한겨레 2017년 3월 3일자 보도 내용)

청양군 강정리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석면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석면피

30) 한겨레 2017년 3월 3일자 12면 보도 내용

해구제법에 따라 인정한 석면피해자 2,334명 가운데 충남 거주자가 903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런데 경기와 서울, 대전에 사는 피해자도 과거에 충남 지역에서 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 석면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충남에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³¹⁾ 이 때문에 정부는 충남 지역 폐석면광산 일대를 석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양군 강정리 경우처럼 지금도 폐석면광산 부지에서 토지를 이용한 활동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석면폐 2~3급은 요양수당 2년 한도를 개선해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비단 석면피해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당진, 서산, 서천, 보령 등지 농어촌지역 주민은 수많은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과 송전탑 시설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최근 세종시의 건설과 같은 도시개발과 도로 및 산업시설의 입지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아산시 음봉지역의 산업유해시설의 개별입지에 따른 주민의 건강권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해당지역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산업유해시설은 바로 음봉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업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근 아산시로부터 공장 증축이 허가되었다.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자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³²⁾

이처럼 ‘현재 농촌은 난개발, 혐오 및 위험시설 유입, 도로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 등으로 농사지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9명의 응답자 모두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한다.’는 3명이었다. ‘보통이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한 명도 없었다. 그 만큼에 환경권에 대한 응답자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충남 지역 석면피해자 가운데 79%(716명)는 석면폐 환자다. 석면폐는 먼지 등이 폐에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진폐증의 하나로, 석면 원료를 직접 다루는 노동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석면폐가 집단 발병한 것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중략)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충남에 석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 전국 폐석면광산의 66%(25개), 사문석광산의 56%(9개)가 몰려 있는 지형적 이유를 꼽았다. (한겨레 2017년 3월 29일 16면 보도 내용)

32) **"아산시를 규탄,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무시한다" 아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음봉KB오토시스(주)사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음봉초학부모대책위원회·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10일 '아산시는 초등학교 앞 200m 거리에 5만평 부지의 대규모 공장 증축 인허가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아산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업체에 대한 음봉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KB오토시스 공장에서 취급하는 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어떻게 폐놀, 카드뮴, 비소, 황 등을 관리하고, 오폐수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코리아플러스 2017년 8월 10일자 보도 내용)

그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당진의 ⑩김*봉은 “지역발전이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농촌을 난개발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노동권을 위협해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아산의 ④박*우는 “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난개발과 법적 오남용이 농촌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발전과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결국 난개발로 이어져 지역주민, 특히 농민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개발행태가 농촌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의 ①강*주의 말처럼 “환경권은 늘 개발 및 성장주의에 압도되어 왔다.”는 것이다.

[표 4-4] 각종 개발과 위험시설 유입으로 인한 피해 의견

항목	빈도	이유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동의한다.	⑤⑨⑫	⑤농지 주변에 각종 공장 등이 설립되어 대형차량이 이동하고 환경도 오염된다. 농사지를 권리가 약해지고 있다. 지류정비사업을 예로 들면, 아산 인주, 산장지역 하천의 농사짓던 농지에 아무도 오지 않을 자전거도로, 공원 등이 만들어지면서 농지가 강탈되고 있다.(현재 사업 진행중) ⑫대부분의 농민들은 환경권 침해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하다. 그러나 점차 강해지고 있다.(축사 건립 문제 등)
⑤ 매우 동의한다.	①②③ ④⑥⑦ ⑧⑩⑪	①환경권은 늘 개발 및 성장주의에 압도되어 왔다. ②어떤 시설이라도 지역민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농민단체,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④상식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난개발과 법적 오남용이 농촌지역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⑥농촌다움을 잃어버린 농촌은 가치를 잃어버린 재화와 같다. ⑩지역발전이나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농촌을 난개발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노동권을 위협해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⑪친환경 농업에 오염된 공기와 환경이 걸림돌이 된다.

농촌의 환경 파괴와 농지침탈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서도 자행됐다. 농민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한 많은 농지들이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사라졌고 농민의 생존권은 빼앗겼다. 아산의 ⑤오*는 “농지 주변에 각종 공장 등이 설립되어 대형차량이 이동하고 환경도

오염됐다. 농사지를 권리가 약해지고 있다. 지류정비사업, 예를 들어 아산 인주, 산장지역 하천의 농사짓던 농지에 아무도 오지 않을 자전거도로, 공원 등이 만들어지면서 농지가 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의 ⑥신*봉이 “농촌다움을 잃어버린 농촌은 가치를 잃어버린 재화와 같다.”고 응답한 것처럼 농촌다움을 무시하고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농촌에 도시의 편리시설을 이입하는 정책과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과 지역주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에는 환경에 대해 간과하고 지낸 부분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공주의 ⑫강*야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환경권 침해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점차 강해지고 있다.”(축사 건립 문제 등)고 응답했다. 환경 보존권은 앞으로 점점 더 지역 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산의 ③이*희는 “농민단체,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역,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내 주민들의 자각된 의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3. 소득 보장권

유엔권리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소득 보장권은 농민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적정 수입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앞서 농민인권에 중요한 두 가지 권리인 토지 보호권과 환경 보존권도 꼭 필요하지만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농민의 인권은 물론이고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득권이 최근 들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농민의 소득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해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도시민 대비 농가소득은 62.5%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중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가 점점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도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원이었던 쌀도 최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고 농외소득을 찾기로 쉽지는 않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소득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농가소득 하락의 근본적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은 ‘무분별한 수입개방 정책’을 꼽았다. 농업경쟁력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1990년대 초반 시작된 농산물 개방 협상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후 계속되는 WTO 협상과 계속되는 FTA 타결은 농민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사인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할 만큼 농업포기정책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다. 2015년 11월 한중 FTA 타결까지 우리나라는 15건의 FTA 협정으로 전 세계 54개국과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남미, 유럽 등 거의 모든 농업 강대국과의 FTA 협정 과정은 우리나라 농민의 생존권 박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과정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농업은 일부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정책도 경쟁력, 효율성을 추진하는 각종 농업·농촌정책은 지양하고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농가소득 하락의 근본적 이유

항목	빈도
① 무분별한 수입개방 정책	3566789101112
② 농업직불금 정책의 미흡	3
③ 농외 소득의 부재	-
④ 자연재해, 가축질병, 기후변화의 영향	-
⑤ 기타	12(자주적이지 못한 수입개방 정책)4(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 수립과 역량 부재)

농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직불금의 확대, 농민기본 소득 보장, 농외소득의 확대, 유통 및 판매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 자연재해, 가축질병, 기후 변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 기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음 [표 4-6]은 농민이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12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먼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응답은 농민기본소득 보장이었다. 홍성의 ①강*주는 “기본 소득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응답했고, 같은 홍성의 ②오 *도 “농민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진의 ⑩김*봉 또한 “농업의 기본적인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이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최근 들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며 농민이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소득이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이미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되기도 했으며 대선 후에는 정부차원에서 유아수당, 청년수당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면서 현재 농민단체 등에서도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농가소득 하락으로 농민의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이 가장 절실한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강*주의 말처럼 농민기본소득 말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두 번째 많은 응답은 농업직불금의 확대였다. 농업직불금은 WTO 체제 하에서 농업의 지속성과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쌀농업직불금, 그리고 최근 밭농업직불금 등 10여 가지 직불금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직불금제도가 있지만 농가 직접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 직불금의 종류는 많지만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한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직불금이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농지 규모가 큰 농가는 직불금을 많이 갖고 농지가 별로 없는 영세소농에게는 직불금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이 1.5ha이기 때문에 농가의 한 해 평균 직불금 규모는 100만 원 안팎이 된다. 한 달 평균 10만 원도 안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영세소농들은 직불금의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직불금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직불금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청양의 ⑨임*빈은 “농업직불금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직불금, 산림직불금 등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환경보전직

불금과 산림직불금 등 직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산림직불금은 우리나라가 산림이 많고 이를 이용하는 임업농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 방안을 적극 타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산의 ③이*희는 “농업직불금, 기본소득 보장이 농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답했다. 농업직불금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 그래야만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고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형 농업직불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후상박, 면적이 적은 농가들에게는 혜택을 더해주고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액수를 줄여 농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많은 응답은 유통 및 판매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이었다. 사실 농산물 유통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문제는 늘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농민의 농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주의 ⑫강*야가 “농업인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처럼 유통 개선을 통해 농민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런데 ⑫강*야는 정당한 대가는 유통의 개선을 통해 1차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직불금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통을 통한 정당한 대가 못지않게 직불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4-6]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근본적 대책

항목	빈도	이유
① 농업직불금의 확대	③⑨⑪ ⑫	③농업직불금, 기본소득 보장이 농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②와 중복 답변) ⑨선진국 수준으로 농업직불금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직불금, 산림직불금 등 직불금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② 농민기본소득 보장	①②③ ⑤⑥⑦ ⑧⑩	①기본소득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②농민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⑩농업의 기본적인 공익적 가치와 식량주권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이 요구된다.
③ 농외소득의 확대	-	-
④ 유통 및 판	②⑫	②농산물의 지역생산과 지역가공, 지역소비가 필요하다.

매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		⑫농업인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차선택으로 직불금 확대를 선택한다. (①과 중복선택)
⑤ 자연재해, 가축질병, 기후 변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	-	-
⑥ 기타	④	④농업을 1차산업으로 보는 정책의 극복이 필요하다. 농업을 6차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구호에 가깝다. 현재 한국정책은 투입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홍성의 ②오 *는 대안적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의 지역생산과 지역가공, 지역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지역 내에서 로컬푸드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관계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상받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컬푸드는 현재 로컬푸드 판매점, 직거래 장터, 학교급식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농민의 소득보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소영세농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유통채널인 만큼 향후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5장 정책 과제

1. 기본 방향

충남도는 2012년 5월 처음으로 도민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5월 제1기 도민인권 증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4년 10월에는 <충남도민 인권 선언>을 선포하고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선언>에 농·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나아가 2014년 12월에 수립된 <도민 인권정책 기본계획>에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했다.

그 후 일 년 뒤인 2015년 12월에는 인권도정을 선포하고, 2016년 2월에는 도-시군 인권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3월에는 제2회 한국인권회의를 충남에서 개최하며 인권충남을 대외에 알렸고 7월에는 도 인권위원회 제2기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민 인권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남인권센터를 충남도청 내에 개소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충남도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각 부서별 인권정책 주요 과제와 추진 전략 보고를 통해 충남도 인권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는 짧은 시간이지만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의 이러한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해 도민의 인지 여부와 농민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12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먼저 <충남도민 인권 선언>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4명은 ‘들어본 것 같다.’, 5명은 ‘알고 있다.’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3명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농민인권 상황은 이전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명은 ‘변함없다.’고 응답했고, 4명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나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2014년 11월 <충남도민 인권 선언>을 선포하고 매년 기념행사와 인권 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민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충남도민 인권 선언> 인지 여부와 농민인권 상황 평가

<충남도민 인권 선언> 인지 여부		충남도 농민인권 상황	
항목	빈도	항목	빈도
① 전혀 모른다.	2①	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2
② 모른다.	6	② 나아지지 않았다.	18①
③ 들어본 것 같다.	478⑫	③ 변함없다.	34567⑩
④ 알고 있다.	139⑩	④ 나아졌다.	9⑫
⑤ 잘 알고 있다.	5	⑤ 훨씬 나아졌다.	

더욱 주목할 부문은 충남도 농민인권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고 농민인권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조사대상자 12명의 평가에 따르면, 7명은 ‘충남도의 인권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고, 2명은 ‘안 좋은 편이다.’, 1명은 ‘매우 안 좋은 편이다.’고 응답했다. 반면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충남도는 ‘인권충남’을 표방하고 <충남도민 인권 선언>을 선포하고 매년 기념행사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과 지역활동가, 전문가의 평가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 타 지역과 비교한 충남도의 농민인권 상황

항목	빈도
① 매우 안 좋은 편이다.	①
② 안 좋은 편이다.	3⑩
③ 차이 없다.	123456⑫
④ 좋은 편이다.	9
⑤ 매우 좋은 편이다.	

앞선 조사에서 충남도의 농민인권 상황은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농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지막 조사에서는 ‘향후 농민이 가장 보호 및 수호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봤다. 이를 통해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12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4명은 ‘농민의 역할과 가치 홍보’를 선택했다. 농업이 왜 필요하지, 농민이 얼마나 중요하지, 농민인권이 왜 향상되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홍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 스스로도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장할 수 있고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 알아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3명은 ‘농민권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를 선택했다. 농민의 권리는 외부에서 기인한 면도 크지만 농민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에는 이러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즉, 농업회의소와 같이 농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농민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민의 권익을 스스로 찾아내고 보호하는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에는 여성농민회를 통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성농민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농민에게는 자신의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해 여성농민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만들어 나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성농민회에 대한 지원과 이를 통한 여러 정책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5-3] 향후 농민이 가장 보호 및 수호해야 할 권리

항목	빈도	이유
① 농민단체 참여 및 결속 강화	-	-
② 농민의 역할과 가치 홍보	①③⑧⑫	<p>①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멸종시키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p> <p>③ 왜 농업이 필요한지, 농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농민인권이 왜 향상되어야 하는지 국민들 속에서 지지 받아야 한다.</p> <p>⑫ 농민 스스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알아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p>
③ 농민권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④⑤⑩	<p>④ 농업인의 삶과 권리는 외부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지만 스스로의 권리를 획득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p> <p>⑤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할 조직, 예를 들어 농업회의소 등이 필요하다.</p> <p>⑩ 농민권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여성농민회를 통한 지원확대가 요구된다.</p>

④ 농민 간 친목도모 및 자립 강화	③⑨⑪	<p>③농민이 자립력을 키워야 하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농민의 가치가 훼손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②와 중복답변)</p> <p>⑨보조금에 너무 익숙한 점을 들어보고 싶다. 교육과 계몽, 홍보에 집중하고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p> <p>⑪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으니 어려운 일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않는다.</p>
⑤ 기타	②	<p>②정부정책과 농민권리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중요성은 어려서부터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체험교육을 넘어 학교마다 농장이 있고, 각 수업이 농업과 연계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내가 먹는 먹거리를 직접 키우고 그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p>

다음 3명도 ‘농민 간 친목도모 및 자립 강화’를 선택했다. 농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농민들(농민단체) 간 단합과 자립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농민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농민 단체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농민들 혹은 농민단체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정책과제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농민단체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쌀값 폭락의 시대 식량주권과 소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GMO가 범람하는 지금 종자주권과 식품 안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농민단체 간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민 스스로도 어떻게 자립을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산의 ③이*희가 “농민이 자립력을 키워야 하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농민의 가치가 훼손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청양의 ⑨임*빈이 “보조금에 너무 익숙한 점을 들어보고 싶다. 교육과 계몽, 홍보에 집중하고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의존적이었던 관행을 바꾸어 농민 스스로 자립심을 높여 농민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진의 ⑪한*숙이 강조한 것처럼 소통의 기회를 늘려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2. 정책 과제

본 연구에서는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 국내외 농민인권 관련 논의를 파악하고, 충남도 거주 농민인권 관련 농민, 지역활동가, 연구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민인권 실태와 향후 증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

그동안 우리나라 농정은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강조하는 농정으로의 전환해 왔으나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은 우리나라 농정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농정의 방향이 농업과 농촌 관련 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농민이라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1990년대 수입개방 이후 역대 정부마다 수십 조, 참여정부에서는 119조 원의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늘날 농민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농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역대 정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농민과 도시민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농촌인구는 갈수록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남아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으로 농촌 곳곳에 세워진 수많은 건물과 시설들, 그리고 정주기반 향상과 소득 개발을 위해 세워진 마을시설들이 이제는 운영할 사람도, 역량도, 여건도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발을 위한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망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많은 사업비의 일부라도 농촌에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해 진정으로 농촌에 사람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농민기본소득제 도입과 같은 보편적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 기본소득은 사업 중심의 농정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 조사한 12명의 패널 가운데 홍성의 강*주가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권리 이전에 생존의 문제”라고 응답한 것처럼 현재 농민의 권리 가운데 가장 절박한 권리는 기본적 소득 보장의 권리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도 기본소득제는 중요 쟁점 중의 하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그만큼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충남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충남도는 현재 “충남 환경농업 실천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개념의 농업직불금을 재편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농가는 환경농업 실천의 대가로 1년에 약 36만 원, 한 달에 약 3만 원의 농업직불금을 받는다. 지금은 많지 않는 액수이지만 향후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이러한 사업에 투입한다면 농업직불금은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그 규모를 한 농가당 10만 원 정도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셋째, 올해 실시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지면적과 연령의 제한을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에서도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 확대가 요청된다.

2)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 필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동학농민혁명 선언 이래 많은 역사의 고비에서 농민들은 농업, 농촌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선언하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역량도 부족했고 각 단체별 선언 내용과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민의 권리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농민권리선언은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들의 가치와 권리가 어떠한지 하며 향후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을 위한 실무그룹에서 2013년 처음 13개 조항

으로 제시한 농민권리선언은 이후 2015년에는 30개 조항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다시 2017년에는 27개 조항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현재에도 농민권리선언은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개의 조항으로 결정될지는 불명확하나 최종적으로 25~30개 조항에서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암튼 최종적으로 몇 개의 조항으로 결말이 나든 유엔인권이사회 의 <농민권리선언>은 앞으로 농민권리, 즉 농민인권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농민인권에 관한 이러한 유엔 차원의 기준 설정은 향후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에도 어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업인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은 <농민권리선 언>을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5개년마다 수립하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기본 틀과 기준을 유엔인권이사회의 <농민권리선언>을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또한 농어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 계획의 기본적인 관점은 정부 차원의 사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있다. 그래서 농어민의 삶의 질 평가 척도 또한 측정하기 용이한 정책 항목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농민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토지소유권의 문제, 종자주권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민인권의 관점에서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가 필요하다. 충남도는 우리나라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했고 인권선언을 선포한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어민의 권리’를 규정했다. <충남도민 농민인권> 제4장 제12조 농어민의 권리에는 첫째,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둘째, 충청남도는 농어 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의 이러한 농어민의 권리선언은 우리나라 인권 논의와 정책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인권선언과 논의에서 농어민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으로만 그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농어민의 권리 선언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매년 초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도민 인권 증진 시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충남도청 각 실·국에서 분야별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표한다. 농정국에서도 농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농민인권 관련 사업의 범위가 좁을 뿐만 아니라 농민의 인권 증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³³⁾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여기에서 설정된 사업을 매년 모니터링해가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 복지, 교통 분야의 인권정책 사업을 좀 더 새롭게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가 있을 때 농민인권도 조금씩 진전될 것이다.

셋째, 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유엔농민권리 선언>을 토대로 농민인권의 실태를 조사한 것과 같이 충남도 특성을 반영한 ‘농민인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농민인권의 좌표와 이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농민의 토지권, 소득권, 환경권에 관한 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기존의 인권논의는 보통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난민, 이주자, 성소수자 등으로 농민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농민인권도 인권 논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왜냐면, 앞서 제2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인권은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이 인류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내 놓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많은 부분은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또한 유엔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를 중요하게

33) 충남도청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의 농어민 인권증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② 소외농촌 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효도버스) 확대, ③ 마을어장 내 여성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④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지원, ⑤ 도서 특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다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와 재난은 개도국 농촌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도 빈곤과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SDGs와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이러한 목표와 협약의 많은 부분들이 농민인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결국 농민, 농촌, 농업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유엔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가 <유엔농민권리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엔 차원에서 농민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국내 각급 인권 관련 단체와 학계, 기관에서도 인권 논의에서 농민인권을 중요 의제로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인권 논의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현재까지 농민인권 담당 조직과 담당관이 없다. 현재 유엔 차원에서 농민인권을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다뤄나갈 필요가 있다. 굳이 유엔 차원의 논의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오래 전부터 농민인권은 중요한 문제였으나 인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농민과 관련한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극적으로 대해왔다. 밀양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농촌지역 주민들, 쌀값 하락에 항의하다 살인적인 물대포에 부상을 입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 제주도와 충남 청양군에서 오래도록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의 폐쇄를 주장하는 두 강정리 주민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호는 소극적이거나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농민인권의 문제가 소홀히 다뤄진 것은 농민인권에 대한 개념과 세부 규정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적극 조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가 필요하다. 유엔 차원에서도 농민인권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고 신정부에서도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만큼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적극 조응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에서 공약한 농어촌·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시 농어민인권증진 분야도 설치해 농어민인권증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농어민인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많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 내 농어민인권 분과 설치를 통해 농어민인권 증진에 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인권재단 등 NGO 조직 내 농민인권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인권관련 NGO 단체에서도 농민인권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인권관련 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을 담당할 전문 조직과 인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권관련 NGO에서도 향후 농민권리선언을 계기로 조직과 인력을 갖추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길 기대한다.

4)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적 틀 마련

현재 많은 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서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어 있는데 농민권리선언을 계기로 농민인권 관련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유엔 차원의 농민권리선언이 선포된다면 정부 차원의 인권계획에 농민인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이다. 충남도의 경우 2014년도에 수립된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농어민인권 증진이 포함되기도 했다. 따라서 농민인권이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하다.

첫째, 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관련 법률과 규정에는 농민인권은 그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농민권리선언>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법률체계에서 농민인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증진 관련 계획 수립에 농민인권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남도가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도 농민인권 증진 부문은 대부분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농민인권 분야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발굴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충남인권센터는 충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16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주로 행정조직 내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조사, 그리고 주로 도청 각 부서에서 마련한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³⁴⁾ 충남인권센터가 설립 초기이고 인력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행정조직 내 인권 관련 상담 및 관련 사업 평가 업무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조직이 안정화되고 인력이 보강된다면 충남도내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³⁵⁾

예를 들어, 주변의 폐기물처리업체의 환경오염으로 오래도록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쉽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양군 강정리 사태는 인권침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례이나 아직 인권침해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정리 사태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많은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인권센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여러 채널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한 후 인권침해 요소가 명확한 경우 공개 성명서 발표, 언론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자료수집과 공론화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농촌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재하고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남인권센터 내 활동하는 인권보호관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인권보호관은 지역

34) 충남인권센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1)인권교육(인권교육 모니터링, 출자출연기관 인권교육 등), 2)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인권침해, 차별 등에 대한 상담, 찾아가는 인권상담 등), 3)인권정책(인권실태조사, 인권지표 및 인권영향평가 등), 4)인권거버넌스(시군인권위원회, 민간인권단체 등과 연계, 협력체계 구축)

35) 충남인권센터는 도민 또는 도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 상담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최장 90일 내에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 무분별한 난개발, 환경유해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결정 과정과 입지로 인한 피해 구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를 전담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농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 촉진

현재 유엔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농민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제 소농 연대그룹인 비아 캠페시나는 90년 이후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와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영세농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아 캠페시나 자체적으로 농민권리선언을 만들어 유엔에 청원했다. 그 결과 유엔인권이 사회에서도 비아 캠페시나의 이러한 소농의 생존권 보장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고 2010년경부터 유엔차원의 농민권리선언 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농민권리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유엔차원의 <농민권리선언>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국여성농민회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농민단체 내에서 농민인권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국여성농민회는 오래전부터 비아 캠페시나 아시아지역에 참여하며 농민권리선언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국내에 알리고 연대를 모색했다. 다행히 올해부터 농민권리선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농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인권 논의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농민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제안한다.

첫째, 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전국여성농민회 중심으로 농민인권 논의를 해왔으나 최근 들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다른 농민단체, 진보정당, 연구단체, 농업계 언론 등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농민인권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농민인권 논의 동향 소개, 한국에서의 대응 방향,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이다. 농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민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들을 알리고,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인권센터’(가칭)와 같은 조직을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민인권센터’는 설립은 농민단체들이 연대해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한우협회 등 많은 농민단체들이 자신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각 단체마다 가치와 목표의 차이로 인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쉽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농민인권은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농민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많은 농민단체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농민인권 보호와 증진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기관이 협력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농민인권은 농민의 기본권이고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농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테제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농민 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향후 ‘농민인권센터’(가칭)가 설립된다면 농민인권 보호와 증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⁶⁾

셋째, 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의 실시다. 올해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인권입국(人權立國)’을 표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나갈 것을 선언했다. 인권중심의 국정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충남도는 이미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이는 지난 20세기 국가와 행정, 효율과 생산의 가치가 중심이 된 시대를 마감하고 주권자가 주인 되고 사람이 가치인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충남도는 인권 중심 도정 실천의 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인권 교육을 실행 중에 있다. 충남인권센터가 주도해 20개 공공기관 임직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인권교육이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향후 도내 일반

36) ‘농민인권센터’ 설립은 최근 육군대장 부부 ‘갑질’ 등 군대 내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해 폭로함으로써 군인권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민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민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해 알림으로써 농민인권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까지 확대 실시되길 기대한다. 특히 농업·농촌 관련 단체 및 조직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인권감수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현재 유엔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 권리선언>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준비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확대되어 나간다면 농민인권 증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개방화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는 농민의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현재 농민인권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충남’을 표방하고 있는 충남도가 농민인권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그리고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했다. 연구 목적은 크게, 1)국제 소농 연대조직인 비아 캠페시나와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의 농민인권 논의 배경 및 내용, 그리고 쟁점사항 분석, 2)현재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민권리선언>을 토대로 충남도의 농민인권 실태 조사, 3)심층인터뷰를 통한 농민권리 보호 및 수호에 관한 요구도 분석, 4)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지시이다.

제2장에서는 농민권리에 관한 선행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권리선언>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왜 유엔 차원에서 농민인권을 중시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다. 또한 1994년의 동학농민혁명 포고문, 1993년 농업인의 날에 선포된 <농민헌장>, 2014년에 선포된 <국민농업헌장>, 그리고 같은 해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과 이 선언에 담긴 ‘농어민의 권리’ 선언에 관한 의의를 살펴보았다. 유엔에서 농민인권을 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엔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을 본 장에서 밝혔다.

제3장에서는 그렇다면 충남도의 농민인권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본 장에서는 총 12명의 전문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12가지 농민권리의 각 항목별 현황과 향후 중요도를 평가한 후 향후 충남도 농민인권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생물다양성 수호권, 환경 보존권, 토지보호권, 소득보장권 등에 중요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앞선 조사를 통해 농민권리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요도가 높은 토지 보호권, 환경 보존권, 소득 보장권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농업의 기반이 토지이지만 현재 농민들은 토지소유의 문제로 인해 토지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에 대한 공개념 강화, 공유화 방안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농사짓기도 힘든 상황인데 농민들이 알지 못하는 각종 개발, 환경유해시설의 입지, 개발 계획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농민(지역주민)에게 영향이 있는 개발사업과 환경유해시설 유입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농민(지역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셋째, 조사응답자들은 현재 농가의 실질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농업직불금의 확대와 농민기본소득의 도입을 제시했다. 한 조사대상자는 ‘인권 이전에 생존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농민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민 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한다. 본 장에서는 큰 틀에서 5가지 정책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실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결론

앞서 제5장에서 농민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농민인권은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요 의제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여농 등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될 뿐 공론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농민인권은 농민의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과제와 세부 정책 과제들은 현재에는 그 실현성이 다소 낮더라도 향후 농민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5가지 정책 과제의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 2)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농민 또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은 국가 차원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고 충남도가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형 농업환경실천사업은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처음 도입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금액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의 소득중심의 경제와 사람중심의 경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을 <유엔농민권리선언> 기준으로 재편, 2)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 3)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관리 등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계획은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는 사업 목표의 관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농민인권 관점에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는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토지권, 환경권, 소득권 등과 같은 농민의 삶과 직결된 권리에 대해서는 지표관리를 통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이다.

셋째,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2)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3)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등이다. 유엔에서 아직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구하기가 어렵겠지만 머지 않는 날에 통과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가 필요하고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도 이를 위한 전담 부서 혹은 담당관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인권관련 NGO에서도 농민인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2)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3)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다. 현재까지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는 농민인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향후 유엔 차원에서 농민권리선언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관련법과 제도에 농민인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계획에도 당연히 농민인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군 단위 인권증진 계획에 농민인권 분야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인권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농민인권까지 관여할 여력은 안 되지만 향후 여건이 갖춰진다면 농민인권 증진에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도내 많은 지역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재 노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1)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2) '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3)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등이다. 농민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농민인권은 농민 스스로 지키고 찾아나가는 길밖에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인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연결 고리로 해서 농민단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민인권센터'(가칭)와 같이 농민인권 증진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체를 통해 농민 스스로 교육하고 인식함으로써 농민인권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표 6-1]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세부 정책 과제	비고(실행 주체)
1.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1)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	중앙정부(농림부)
	2)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중앙정부, 충남도
	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전담조직 설치	충남도
2.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	1)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정책을 <유엔농민권리선언> 기준으로 재편	중앙정부
	2)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	충남도, 농민단체
	3)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마련 및 관리	충남도, 농민단체, 연구기관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1)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2)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중앙정부
	3)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인권관련 NGO단체
4.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2)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3)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충남도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	1)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농민단체, 중앙정부, 인권기관 및 단체, 정당, 전문가 등
	2) ‘농민인권센터’ (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농민단체 등 NGO
	3)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농민단체, 충남인권센터 등

3.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농민인권에 대한 개념 설정의 한계이다. 농민인권에 대한 내용은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4차례 국가 간 협의와 수많은 내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즉, 농민 인권의 명확한 개념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처음으로 제출된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을 기준으로 농민인권 실태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 완전한 개념의 농민인권 실태 조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조사 범위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민, 지역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등 12명의 전문패널을 대상으로 농민인권 실태와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했지만 이들이 과연 충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자신할 수 없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를 병행했지만 이들의 의견을 충남도 농민인권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농민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한계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농민인권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용되고 않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농업계 내부에서조차 농민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농민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농민은 모든 방면에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한 농민단체의 활동이 농민인권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민인권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현성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5가지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민인권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정책 제시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 현재 유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현재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제안들이 언젠가는 조금씩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세계인권선언>이 법률적 강제는 없을지라도 많은 식민지의 해방과 독립투쟁 그리고 인권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 스테판 에셀의 다음의 말을 새기고 유엔 차원의 <농민인권선언>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지니는 효력이 그야말로 선언적인 것에 그칠 뿐 법률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선언이 1948년 이래로 강력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은 이 선언에 힘입어 독립투쟁을 벌였으며, 이 선언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나가는 그들에게 정신적 토대의 씨앗을 뿌려준 셈이었다. - 스테판 에셀³⁷⁾

37) 조효제(2011). 인권을 찾아서. p.9. 참조. 스테판 에셀은 우리에게 <분노하라>로 알려진 프랑스의 노 레지스탕스이다. 행동하는 사회주의 지식이었던 그는 한때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활동도 했다.

참 고 문 헌

- 강현수. 2014. 인권 도시 만들기. 그물코(충남발전연구원 현장 총서1)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제1~3차 통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첫걸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양성과정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해외 인권증진사례 모음집.
고승희 등.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
연구원 전략과제.
고승희 등. 2013.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고승희·이수철. 2015.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김근해·강성권. 2013.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419~440.
김두식. 2015. 불편해도 괜찮아: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창비.
김득화·황경열. 1998.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연구”.
〈특수교육연구〉 제21집, 95~126.
김용현. 2015. 충남도 농촌지역 복지, 보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_____. 2016. 고령사회의 쟁점과 충남도의 대응 방안.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농림부. 제1~3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류은숙. 2009.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_____. 2015. 심야인권식당. 따비
_____. 2017. 미처 하지 못한 말들: 이제 마주하는 인권의 문장들. 낮은산.
박경철. 2014. 충남도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_____. 2015.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 『열린 충남』 겨울호, 29~33.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31~55.
박민선·허미영. 2005. “한국농가의 성별 불평등과 변화가능성: 가족경영협약서 분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5집 1호, 103~132.
박신규·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 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20집 1호, 89~129.

- 브랑코 밀라노비치, 서정아 옮김.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 21세기북스.
-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2015.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 석소현·김귀분. 2008.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 .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3호, 311~321.
- 성태규 등. 2014.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충청남도.
- 송미령·권인혜. 2014. 농촌 마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KREI 현안분석 제1호.
- 아네트 아올레리 데스마레이즈, 박신규 등 옮김. 2011. 비아 캠페시나: 세계화에 맞서는
 소농의 힘. 한티재.
- 윤수종. 2010. “1970년대 이후 주류 농민운동의 형성과 도전” . <농촌사회> 제20집 1호, 47~87.
- 이수미. 2016. 농민의 권리, 유엔농민권리선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제242호 이슈보고서
- 이수철 등. 2013. 충청남도 자살 실태분석 및 예방정책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 이수철 등. 2014. 충남의 지역공동체와 행복 연구: 충남의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전략과제.
- 이은기. 2015. “환경인권에 관한 소고” . <환경법연구> 제37권 2호, 322~355.
- 이준일·김지혜·이승택·박진아. 2015. 인권행정 길라잡이: 국가기관편. 국가인권위원회.
- 장지호. 2016. “인권 정책 사례 연구: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서의 시민위원회 참여의 한계”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99~124.
- 정영선·조성규·유종민·설재영. 2015. 인권행정 길라잡이: 지방자치단체편. 국가인권위원회.
- 조효제. 2011. 인권을 찾아서. 한울.
- 토마스 페인, 박홍규 옮김. 2014. 상식, 인권. 필맥.
- 토마스 페인, 남경태 옮김. 2012. 상식. 효형출판.
- 최선미·홍준형. 2016.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자살 영향요인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30.
- 최정학. 2007. “1987~2007, 한국의 인권, 인권운동” . <민주법학> 제35호, 51~80.
- 충청남도. 2014.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 충청남도. 2017. 도민인권 증진시책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

- Golay, Christophe. 2013. Legal reflec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Geneva Academy.
- Golay, Christophe. 2015. Negotiation of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Academy in-Brief No. 5. Geneva Academ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La Via Campesina. 2009. Declaration of Rights of Peasants - Women and Men
- Sangkyung, Lee. How can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be Functionally Divided in Order to Better Protect and Enhance Human Rights in Korea?. <세계헌법연구> 제21권 1호, 165~195.
- UN Human Rights Council. 2012. Final stud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on the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 UN Human Rights Council. 2013.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2016. Opening statement of Ms. Jyoti Sanghera in Third session of Working Group on a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Geneva 17 May 2016).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국제농민인권대회를 다녀와서: <http://blog.daum.net/qkagksmf7/38>

농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워킹 그룹(Park 1~2): <http://www.apil.or.kr/1381>

비아 캄페시나_La Via Campesina: <http://viacampesina.org/>

유엔인권이사회: <http://www.ohchr.org/en/hrbodies/hrc/pages/hrcindex.aspx>

부 록

부록 1 :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 p.117

부록 2 :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2013년 2차 실무그룹안)/ p.127

부록 3 :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2013년 2차 실무그룹안)/ p.133

부록 1 :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본 자료는 충남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농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표입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충남도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신다면 향후 충남도 농민의 보dana은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장

2017. 5

♣ 문의: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박경철 책임연구원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73-26 Tel: 041-840-1206, E-mail: kcpark@cni.re.kr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	--

I 농민인권의 각 조항별 중요도

※ 참조:

본 설문은 현재 UN인권위원회가 준비 중인 <농민권리선언>(농민과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여타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충남도 농민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성된 설문지입니다. 아래는 농민의 권리에 관한 각 항목과 세부 내용입니다. 응답자께서는 농민의 권리에 관한 각 항목별 현재 평가점수(0-10점)와 향후 중요점수(0-10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는 가급적 정수로 하되 소수점도 가능합니다. (예: 7.5, 9.8)

<예시>

권리 내용	세부 내용	현재 평가점수 (0-10점)	향후 중요점수 (0-10)
농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6	9
	<p>*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자유롭게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민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마을 내에서도 많은 일을 하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농가경영체등록, 재산등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농업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권리 내용	세부 내용	현재 평가점수 (0-10점)	향후 중요점수 (0-10점)
I 농민권	1.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2.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3.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4.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구상, 의사결정,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		
	5.식량주권의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II 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1.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 등을 받지 않을 권리		
	2.존엄하게 살 권리		
	3.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을 권리		
	4.건강하고 충족한 음식과 전통 음식 유지 권리		
	5.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사용,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		
	6.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 휴식 등을 누릴 권리		
	7.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		
	8.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		
	9.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10.살충제,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11.여성농민의 가정폭력, 성적, 언어적,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2.여성농민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13.출산과 육아를 결정할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권리 내용	세부 내용	현재 평가점수 (0-10점)	향후 중요점수 (0-10점)
Ⅲ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1.주거와 영농을 위해 토지를 소유할 권리		
	2.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3.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		
	4.삼림과 어장을 보호받고 이익을 얻을 권리		
	5.공정한 보상이 없는 한 이주를 거부할 권리		
	6.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Ⅳ 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1.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		
	2.경제적, 생태적, 문화적으로 위험한 작물을 거부할 권리		
	3.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		
	4.농어업의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		
	5.농업, 어업,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		
	6.자신의 영농방식을 선택할 권리		
	7.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기 술을 사용할 권리		
	8.농민이 생산한 종자를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		
Ⅴ 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1.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도구를 획득할 권리		
	2.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의 생산 도구와 기술을 습득할 권리		
	3.농업생산을 위한 관개 등 수리권		
	4.농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		
	5.정부의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에 관해 참여할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권리 내용	세부 내용	현재 평가점수 (0-10점)	향후 중요점수 (0-10점)
VI 정보 획득권	1.정책, 기술, 가격 등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2.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3.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		
VII 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1.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취득하고 저장할 권리		
	2.지역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		
	3.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		
	4.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		
	5.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획득과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		
	6.수확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보장받을 권리		
	7.식량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		
VIII 농업 가치의 보호권	1.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		
	2.향토지식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		
	3.농업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		
	4.농민의 정신성을 표현할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		

권리 내용	세부 내용	현재 평가점수 (0-10점)	향후 중요점수 (0-10점)
IX 생물다양 성 수호권	1.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		
	2.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작물, 식품, 의약품)을 거부할 권리		
	3. 농민공동체 소유의 상품, 서비스, 자원,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		
	4.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제를 거부할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X 환경 보호권	1.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		
	2. 농민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		
	3. 환경 파괴의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		
	4. 환경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		
	5. 토지 처분에 대해 보상 받을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XI 결사, 의견, 표현권	1. 결사의 자유와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		
	2.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3. 자신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 예술로 표현할 권리		
	4. 자신의 권리 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		
	5. 억압에 저항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XII 정의에 대한 접근권	1.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		
	2.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 위 항목에 대한 전반적 평가		

농민의 주요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앞의 I에서 언급한 12개 권리 항목 가운데 귀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 항목은 무엇인지 우선순위 3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____, ____, ____)

①농민권, ②생명권과 표준 생활권, ③토지와 지역의 보존권,
④종자, 전통지식, 영농 활동권, ⑤농업생산 수단 보유권, ⑥정보 획득권,
⑦농산물 가격과 시장 결정권, ⑧농업 가치의 보호권, ⑨생물다양성
수호권, ⑩환경 보호권, ⑪결사, 의견, 표현권, ⑫정의에 대한 접근권

[토지와 지역의 보존권(토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2. 현재 농촌에서는 임차농이 증가하고 임차농지 또한 증가해 실질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소유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양호한 편이다. ⑤ 아주 양호한 편이다.

3. 현재와 같은 농지소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임차료 인하 ② 농민에 대한 농지매입자금 지원 확대
③ 부채지주 농지에 대한 가중 과세 ④ 농지규제 강화
⑤ 기타_____

▶ 구체적 이유:

[농업 가치 보호권(환경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4. 현재 농촌은 난개발, 혐오 및 위험시설 유입, 도로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 등으로 농사지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 선택한 이유:

5.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및 농촌주거지역 잠식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발 계획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② 대체농지의 철저한 확보
 ③ 개발 계획 결정과정에서 농민의 참여 ④ 지역주민의 승인(투표 등)
 ⑤ 기타_____

[농산물 가격과 시장결정권(소득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최근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있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하락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분별한 수입개방 정책 ② 농업직불금 정책의 미흡
 ③ 농외소득의 부재 ④ 자연재해, 가축질병, 기후변화의 영향
 ⑤ 기타_____

7.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직불금의 확대 ② 농민기본소득 보장
 ③ 농외소득의 확대 ④ 유통 및 판매 개선을 통한 가격 보상
 ⑤ 자연재해, 가축질병, 기후변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
 ⑥ 기타_____

▶ 선택한 이유: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8. 충남도는 2014년 11월 <충남도민 인권 선언>을 선포하고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들어본 것 같다.
④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9. 현재 **충남도 농민인권의 상황**은 이전과 비교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② 나아지지 않았다. ③ 변함 없다.
④ 나아졌다. ⑤ 훨씬 나아졌다.

10. 충남도 농민인권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 좋은 편이다. ② 안 좋은 편이다. ③ 차이 없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은 편이다.

11. 향후 농민이 가장 보호 및 수호해야 할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민단체 참여 및 결속 강화 ② 농민의 역할과 가치 홍보
③ 농민권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④ 농민 간 친목도모 및 자립 강화
⑤ 기타_____

▶ 선택한 이유(그동안 농민 스스로 소홀했던 부분, 또는 농민 스스로 향후 농민인권 보호 또는 수호를 위해 우선해야 할 일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

Ⅲ 응답자의 일반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직업은?

- ① 농민 ②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③ 교육자/연구원
④ 지역활동가 ⑤기타_____

3. 귀하의 생활 소재지는? _____시/군 _____읍/면/동

4. 귀하의 연령은?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2013년 2차 실무그룹안)

농민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3년 6월 20일)

제1조 농민의 정의

1. 농민은 식량 생산 또는 여타의 농업 생산물을 통해 토지와 자연에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갖는 대지의 사람들이다. 농민은 토지를 일구고 대체로 가족노동과 여타의 소규모 형태의 조직된 노동에 의존한다. 농민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지역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 경관과 농업-생태 시스템을 돌본다.
2. 농민이란 용어는 농촌에서 농업 또는 비슷한 직업과 관련한 농사, 소 사육, 목축,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토지를 경작하는 원주민이 포함된다.
3. 농민이란 용어는 또한 땅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범주의 사람들이 무토지자로 간주되며 생계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a. 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농업 노동 가구, b. 어로활동, 지역 시장에 판매할 수공업품 제작 또는 서비스 제공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의 소규모 토지 또는 토지가 없는 비농업 가구, c. 목축민, 유목민, 화전민, 수렵민과 채집민과 같은 농촌의 다른 가구 그리고 유사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들

제2조 농민권

1. 모든 농민,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여타의 국제인권법에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자유롭고 모든 여타 사람들과 동등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 특히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토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구상, 의사결정,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생태적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농민 자신의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결정할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식량 주권의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생명권과 알맞은 표준생활을 누릴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방해, 퇴거, 박해, 임의 체포를 받지 않는 물리적 무결권을 갖는다.
2. 농민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소득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는 알맞은 표준생활권을 갖는다.
4. 농민은 적절하고, 건강하고, 영양 있고, 충족한 음식을 가질 권리와 전통적 음식문화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소비할 권리, 이것을 그들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권리,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안전한 음용수, 위생, 교통수단, 전기, 통신과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적합한 주거와 의복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9. 농민은 가능한 최적표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또한 전통의약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10. 농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살충제와 비료와 같은 농화학제의 오염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11. 여성농민은 가정폭력, 육체적, 성적, 언어적 그리고 심리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12. 여성농민은 그들 자신의 육체가 통제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13. 농민은 그들이 갖길 원하는 아이의 수를 조절하고 그들이 사용을 원하는 피임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14. 농민은 그들의 성적 그리고 재생산의 권리를 완전히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토지와 지역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주거와 영농을 위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토지를 애써 가꾸고, 그들의 토지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사냥과 채집을 하고, 물고기를 기를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의 생활을 위해 남겨놓은 미사용 토지를 소유하고 가꿀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삼림과 어장을 보호하고 그것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농민은 그들의 토지와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지 않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관련 농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와 통보 그리고 승인 후 공정한 보상과 선택이 없다면 어떠한 이주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6. 농민은 토지개혁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대토지소유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토지는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토지소유 제한제는 토지소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 종자, 전통지식, 영농활동에 관한 권리

1. 농민은 그들이 심기를 원하는 다양한 종자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경제적, 생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작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3. 농민은 농업의 산업모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4.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에서 토착지식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농업, 어업, 그리고 축산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생산물과 수집물 그리고 농업, 어업, 축산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그들 자신의 기술과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전의 필요로 그들이 선택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8. 농민은 그들 자신의 수확물을 기르고 발전시키며 그들의 종자를 주거나 판매하는 등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농업생산 수단을 가질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농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와 도구를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은 그들의 사회, 문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적 지원, 생산 도구 그리고 다른 적절한 기술을 습득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 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에서 관개와 농업생산을 위한 수리권을 갖는다.
4. 농민은 지역시장에 그들의 생산물을 팔기 위해 운송, 건조, 저장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지역 및 정부 농업예산의 계획, 집행, 적용과 관련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정보 획득의 권리

1. 농민은 자본, 시장, 정책, 가격 그리고 기술을 포함해 농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해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농산물의 가격과 시장을 결정할 자유

1. 농민은 그들 가족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농업생산물을 우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그들 가족의 욕구의 충족을 보장하는 그들의 생산물을 저장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전통적인 지역 시장에서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그들의 생산물에 대해 공정한 가격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그들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임금을 획득하고 그들의 기본적 욕구와 그들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6. 농민은 그들이 생산한 수확물에 대한 품질 평가에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는 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7. 농민은 식량주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를 기반한 상업화를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제9조 농업의 가치를 보호할 권리

1. 농민은 농민의 문화와 지역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농업에서 지역 지식을 발전시키고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의 농업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개입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농민의 존엄성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생물다양성을 지킬 권리

1. 농민은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갖는다.
2. 농민은 작물, 식품 그리고 의약품을 포함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특허물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지역 농민공동체가 소유하고, 유지하고, 발견하고, 개발하고, 생산한 상품, 서비스, 자원 그리고 지식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초국가적 기업이 만든 인증체계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지원으로 실시되는 농민단체의 지역보장정책은 증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 환경을 보존할 권리

1. 농민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지식에 따라 환경을 보존할 권리가 있다.
3. 농민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모든 형태의 착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농민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하고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5. 농민은 그들의 토지 및 지역에 대한 생태적 부채 그리고 역사적, 현재적 처분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결사,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은 타인과 결사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현지, 지역, 전국, 국제적 차원에서 이의 제기, 청원, 동원을 포함하여 전통과 문화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농민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기타 형태의 조직이나 결사체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들 지역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화적 문학, 지역 예술로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4. 농민은 자신들의 권리요구와 투쟁이 범죄시 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5. 농민은 억압에 저항할 권리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평화적인 직접 행동에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정의에 접근할 권리

1. 농민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농민은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록 2 :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 결의안(2017년 4차 실무회의안)³⁸⁾

농민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2017년 5월 7일)

제1조.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정의

1. 본 선언문에서 농민은 혼자서,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또는 공동체로서, 생계나 판매를 위한 소규모 농업 생산 일을 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가족이나 가사노동 혹은 비화폐적인 방식으로 조직된 노동에 의존하며, 토지에 특별한 의존성과 애착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2. 본 선언문은 재래식 혹은 소규모 농업, 가축 사육, 유목, 어업, 임업, 수렵 또는 채집, 그리고 농업과 연관된 수공업업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유관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3. 본 선언문은 토지에서 일하거나, 이목 및 유목민 공동체, 그리고 토지가 없는 토착민들에게도 적용된다.
4. 본 선언문은 양식업체, 농산업체의 플랜테이션과 농장에서 일하는 고용 노동자, 이주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게도 이들의 법적 지위에 무관하게 적용된다.

제2조. 국가의 일반적 의무

1. 국가는 자국 영토 및 영외에서 모든 농민과 농촌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한다. 국가는 본 선언문의 권리 중 즉각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요소를 점진적으로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2. 본 선언문의 이행에 있어서 노년층, 여성, 청소년, 어린이 및 장애인을 포함하여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권리와 특별한 요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원주민에 관한 특별 법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 및 정책, 국제 협약 및 기타 의사 결정 과정을 채택하고 시행하기 전에, 국가

38) 번역: 조영지 연구원(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는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가 주어진 전제 하에 동의를 얻기 위해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대표체를 통해서 농민과 농촌노동자들과 신뢰를 가지고 협의 및 협력해야 한다.

4. 국가는 각국의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 투자, 금융, 조세, 환경 보호, 개발 협력 및 안보 분야를 포함한 국제 협약 및 기준을 다듬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5. 국가는 개인과 민간단체,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와 같이 국가 규제 대상이 되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농민과 농촌 노동자의 권리 추구를 무효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국가는 본 선언문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국가 간, 특히 농민 및 농촌 노동자 단체를 비롯하여 관련한 국제 및 지역 단체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련한 국제 협력이 농민과 농촌 지역 노동자들을 포함시키며, 이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적절하도록 보장한다.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 사례의 교환 및 공유를 포함하여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c) 과학 및 기술 지식 연구와 접근에 있어 협력을 촉진한다.

(d) 특히 개발도상국에게, 타당할 경우, 기술 및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며, 기술 이전을 촉진한다.

(e) 극단적인 식량 가격 변동과 투기 유인 요소를 제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에서 시장 관리를 개선시키고, 식량비축을 포함하여 시장정보에 대한 적시의 접근을 촉진한다.

제3조. 평등과 차별금지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기타 국제 인권법에 인정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완전히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언어, 혼인여부, 재산, 장애, 국적, 나이, 정치적 또는 다른 견해, 종교, 출생 또는 경제적, 사회적, 기타 지위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 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차별을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4조. 여성 농민과 여성 농촌 노동자의 권리

1. 국가는 여성 농민과 여성 농촌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키고자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야하며, 이를 통해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여성 농민과 여성 농촌 노동자들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며, 농촌의 경제, 사회, 문화 발달을 자유롭게 추구, 참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는 여성 농민과 여성 농촌 노동자들이 본 선언문과 기타 현재의 국제 인권기구에 제시된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개발 수립과 실행에 유의미하게 참여한다.

(b) 가족계획과 관련한 정보, 진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적절한 보건 시설에 접근성을 가진다.

(c)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d) 문맹과 관련한 연수, 교육을 포함하여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모든 종류의 연수와 교육을 받으며, 기술적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및 농촌 지도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e) 고용과 자영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조조직과 협동조합을 조직한다.

(f) 모든 공동체 활동에 참가한다.

(g) 농촌신용, 대출, 판매시설, 적절한 기술에 접근할 권리와, 토지 및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h) 호적 및 혼인상태, 특정 토지제도에 상관없이 토지와 천연자원에 동등하게 접근, 사용, 통제하며, 토지 및 농업개혁과 토지 재정착 계획에 있어서 동등하거나 우선적인 대우를 받는다.

(i) 적절한 고용, 동등한 보수와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소득 창출 활동에 접근한다.

(j)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

(k) 법적, 사적 측면 모두에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는다.

제5조.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와 개발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적절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필요한 공동체의 천연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자원관리에 참여하고 개발과 보존을 통해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의 노동자들은 개발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선 사항과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지닌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노동자들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거나 사용하고 있는 천연자원을 다음 경우에 한해 사용이 허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개인 및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독립적인 주체가 절차에 따라 사회 및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 (b)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가 주어진 전제 하에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고자 신뢰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경우.
 - (c)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이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측과 농민 및 농촌 노동자들의 상호 동의하에 마련된 경우.

제6조.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인 온전성,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무단체포, 억류,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노예 또는 노역상태에 둘 수 없다.

제7조. 이동의 자유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법 앞에 어디에서나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 특히 유목민, 어민, 이주 및 계절 농업노동자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포함한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3. 국가는 원주민 및 국경을 넘나드는 유목민의 방목지나 계절 이주경로, 소규모 어민들의 어장과 같이 농민과 농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문제(越境)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사고, 의견, 표현의 자유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사고, 양심, 종교, 의견,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로컬, 지역, 국내, 국제적 차원에서 이의제기, 청원 및 동원 등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저항하는 평화적 행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 국가는 본 선언문에 기술된 권리의 정당한 행사 및 수호의 결과로 나타난 폭력, 위협, 보복, 법률상의 혹은 사실상의 차별, 억압, 또는 여타 독단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이든 집단적으로든,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자 관할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9조. 결사의 자유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기타조직이나 연합을 형성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조직은 성격상 독립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떠한 방해, 강압,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국가는 특히 이러한 조직과 회원들에 대한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차별을 포함하여 설립, 성장, 합법적인 활동의 추구하고 관련한 장애물을 없애려는 목표 하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해서 농민 및 농촌 노동자들의 협동조합과 기타 조직을 지원해야 하며, 조건과 가격이 공정하며 안정적인고, 존엄성, 품위 있는 삶, 지속가능한 생계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끔 계약상의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참여의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 토지,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에 있어서 직접 그리고/또는 자신들의 대표조직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효과적이고, 의미 있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여를 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그리고/또는 대표조직을 통해 사적 또는 공적 행위자에 의한 먹거리 안전성, 노동 및 환경 기준의 개발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과 확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리고/또는 자신들의 대표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삶, 토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11조. 생산, 마케팅, 유통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상품의 생산, 가공, 마케팅,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를 찾고, 제공받고, 개발하고 전달할 권리가 있다.
2.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택하여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투명하고,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정보에 이들의 문화적 방법에 적절한 언어, 형식, 수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 토지,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지역, 국가, 국제수준에서 자신들의 생산물의 질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초국적기업이 설립한 인증체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사법에의 접근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절차에 접근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며, 개인 및 집단의 권리의 모든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취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기준을 준수하여 관습, 전통, 규칙, 법적 체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내려야 한다.
2. 국가는 공정하고 권한을 가진 사법 및 행정단위를 통해, 당사자의 언어로 시의 적절하고, 지불가능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하며, 효과적이고 신속한 처방을 제공해야 하고, 여기에는 청원, 반환, 손해배상, 보상, 배상금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3.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법적인 지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한다.
4. 국가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국내 인권제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시켜야한다.
5.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에게 이들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수탈하는 목적을 지니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진 모든 행위, 또는 생존수단 및 온전성을 빼앗는 행위, 어떠한 형태로든 강요된 정주 혹은 인구이동, 강요된 동화 또는 통합의 행위를 예방 및 시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노동권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생계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
2. 국가는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 그 가족이 적절한 수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보수를 제공한다. 농촌 빈곤 문제가 심각한 국가와 다른 부문的高용기회가 없는 국가는 노동집약적인 식량시스템을 마련하여 발달시켜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3. 소농 및 영세 어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농촌 지역 노동 감시관의 효율적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투입하여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4. 누구에게도 강제적, 숙박된, 강압적인 노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농민 및 농촌 노동자들, 이들의 대표조직과 협의 및 협력하여, 부채 상환을 위하여 여성, 남성, 아이를 노예 처럼 부리거나, 계절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어민 및 어업 노동자의 강제노동의 경우를 포함한 경제적 착취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적절한 대책을 시행한다.

제14조.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임시노동자, 계절노동자 또는 이주노동자 신분, 자신의 법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안전 및 건강대책의 적용 및 검토에 참여하며, 안전 및 건강위원회의 안전 및 건강 대표자를 선정하며,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복과 보호 장비 그리고 건강 안전 교육을 받고,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며, 자신의 안전 및 건강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작업 활동으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농약이나 농업 또는 산업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서 상기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직업안전성과 농업, 농-산업, 어업 등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정책의 실행, 국내법 및 규제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히 책임당국을 지정하고 분야 간 조정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시정 대책과 적절한 처벌을 마련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사항에 맞게 농촌의 작업장을 위한 적절한 감시체계를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국가는 다음 사안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a) 적절한 국가체계나 책임당국이 승인한 기타 시스템을 통해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수입, 분류, 포장, 라벨에 대한 특별기준, 금지 혹은 제한에 대한 특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b)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생산, 수입, 제공, 판매, 이송, 저장, 처리하는 이들은 국내 혹은 기타 인정받은 안전 및 건강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자에게 적절한 공식 언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그리고 요청 시 권한을 가진 당국에게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 화학물질 쓰레기, 폐기물, 화학제품 빈병의 안전한 수집, 재활용, 처분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안전, 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d) 농촌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건강 및 환경상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 교육 및 공공 인식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해야 한다.

제15조.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식량주권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적절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 최상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누릴 가능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식량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식량주권은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섬세한 방법의 수단을 통해 생산된, 건강상으로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이다. 이는 자신의 먹거리와 농업체계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수반한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로컬,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의 식량주권과 기타 농업,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정책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증진시키고 발달시켜야 한다.

4.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며, 충분하고,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먹거리에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서 기초보건의 기틀에서, 특히 이미 사용가능한 기술의 적용 및 영양분이 충분한 먹거리의 공급을 통해, 임신 및 수유기의 여성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게끔 하는 것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 아동들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부문들에서 특히 부모와 아동들이 영양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 영양과 모유수유의 이점에 대한 기본 지식의 사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6조. 적절한 수입과 생계,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임금과 생계에 대한 권리, 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도구, 기술지원, 신용, 보험, 기타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농업, 어업, 사축 사육의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권리와, 공동체 기반의 상품화 체계를 발달시킬 권리를 지닌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로컬, 국내, 지역시장에서 적절한 수입과 생계를 보장하는 가격에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운송수단과 가공, 건조, 저장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 로컬, 국내, 지역시장을 강화하고 지원하여,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들이 적절한 삶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완전하고도 공정하게 접근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격은 농민과 농촌 노동자, 이들의 조직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설정되어야한다.
4. 국가는 농촌개발, 농업환경, 무역 및 투자정책과 사업이 지역의 생존에 대한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기회가 되는데로 농생태적이고 유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격려해야 하며, 농민-소비자 직거래를 촉진시켜야 한다.
5.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서 자연 재해와 시장실패와 같은 심각한 혼란으로부터 농민들의 회복력을 강화시켜야한다.

제17조.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개인적 및 집단적으로 충분한 삶의 수준을 달성하고, 안전, 평화, 존엄성 속에서 살 공간을 가지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토지, 수자원, 해양, 어장, 목초지, 삼림 등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국가는 혼인상태의 변화, 법적 능력의 결여,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타파하고 금지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상속하고, 유증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3. 국가는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관습적인 토지 소유권을 포함하여, 토지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 소작을 포함하여 토지로부터의 강제추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일정 수준의 토지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공유자원과 이와 연관된 집단적 이용 및 관리체계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4.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토지나 거주지, 또는 자신의 생산 활동과 적절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타 천연자원으로부터 무단 추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국제인권과 인도주의적 법규를 따라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국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처벌조치나 전쟁의 방법 혹은 수단인 경우를 포함하여, 강제적 추방, 주택 철거, 농지파괴,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임의적인 몰수나 수탈을 금지시켜야 한다.
5.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수탈당한 생산 활동에 사용되고 적절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필요한 토지로 돌아가고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 받을 권리, 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의롭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자연재해 그리고/또는 무력분쟁으로 쫓겨난 농민 및 농촌 노동자들에게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회복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국가는 특히 청년층과 토지가 없는 이들에게, 활동에 사용되고 적절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필요한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동등한 접근을 촉진시키고, 포괄적인 농촌 개발을 고무시키기 위해 재분배적인 농업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재분배적인 개혁은 토지, 어장, 삼림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토지의 과도한 집중과 통제를 제한해야 한다. 무토지농민, 소규모어민, 기타 농촌 노동자들은 공유지, 어장, 삼림의 할당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7. 국가는 농생태적 방법을 포함하여 생산에 사용되고 적절한 삶의 조건을 누리는데 필요한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목표로 삼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생물적이고, 자연적 능력과 순환의 재생을 위한 조건을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제18조.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환경과 자신의 토지나 영토 및 자원의 생산력을 보존하고 보호할 권리를 지닌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이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국가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지켜야한다.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지식과 농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역의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 정책의 설계와 실행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
4. 국가는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정보가 주어졌다는 전제 하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위험 물질이나 요소가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토지나 영토에 저장되거나 처분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수단을 취해야 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피해로 인해 권리행사에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응하는데 협조해야한다.
5. 국가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환경법을 집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국가 행위자들의 남용으로부터 농민 및 농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제19조. 종자에 대한 권리

1. 소농과 농촌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a)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들에 관한 전통지식을 보전할 권리;
 - (b)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생기는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 공정하게 참여할 권리;
 - (c) 먹거리와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 할 권리;
 - (d) 농가가 저장한 종자나 번식물질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종자와 전통 지식을 유지, 관리, 보존, 개발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종자에 관한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이를 국내법령에서도 인정해야 한다.
4. 국가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종자를 농민들이 파종적기에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가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종자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종자에 의존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본인들이 재배하기를 원하는 작물과 품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6. 국가는 농민종자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의 종자의 사용과 농생물 다양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7. 국가는 농업 연구와 개발이 농민이나 농촌노동자들의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농민들이 연구와 개발의 우선사항을 정하고 수행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민들의 경험을 고려하고,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작물과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8. 국가는 종자정책, 식물품종보호, 기타 지적보호권, 인증체계, 종자판매법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권리,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농민들의 필요와 현실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생물다양성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농업, 어업, 목축업을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과 그 관련 지식을 보존하고,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사용 및 개발할 권리를 지닌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농업생물다양성의 재생이 기반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목축, 농생태적 시스템을 유지할 권리를 지닌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그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련한 전통지식, 혁신, 농법을 보존할 권리를 지닌다.
3. 국가는 관련한 국제협정을 준수하여, 고갈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며,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 또한 이러한 자원의 사용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는 유전자조작생물의 개발, 처리, 운송, 사용, 이송, 유포로부터 발생하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의 위험을 규제, 예방, 감소시켜야 한다.

제21조.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인권을 가진다. 이는 삶과 모든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은 수자원 공급체계와 위생시설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이는 적절한 가격, 물리적인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문화나 젠더측면에서 비차별적이고 수용 가능해야 한다.
2. 농민과 농촌노동자는 영농과 어업, 목축을 위한 물에 대한 권리와 기타 물과 관계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물과 물 관리 시스템에 정당하게 접근할 권리, 물 공급의 임의 차단이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3. 국가는 관습적이고 공동체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차별 없이 물에 대한 접근을 존중, 보호, 보장해야 하고, 적절한 가격에 개인용, 가정용, 생산용 수자원과 증진된 위생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유목민, 플랜테이션 노동자, 이주민과 같이 빈곤하거나 소외된 계층과 비정규적이고 비공식적인 거주지에 살아가는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
4. 국가는 빠르고 느린 중독을 야기하는 산업폐수 및 농축 미네랄과 화학물 등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과 남용으로부터 습지, 연못, 호수, 강, 개천과 같은 자연 수자원, 분수령, 대수층, 표면수의 재생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5. 국가는 제3자가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수자원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는 다른 용도보다도 인간의 필요, 소규모 먹거리 생산, 생태계적 필요, 문화적 사용을 위한 수자원 활용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이들은 적용 가능한 국제 및 국내 노동법에 명시된 모든 사회보장 권리를 완전히 누릴 권리 또한 지닌다.
2. 농촌의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등한 대우를 누려야 한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기초사회 보장체제로 구성된 사회보호 기반을 설립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은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적어도 핵심적인 보건과

기초수입 보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정의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4. 기초 사회보장은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하고, 적절한 고충 처리 및 청구 절차도 명시해야 한다. 국내법 체계준수를 강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한다.

제23조. 건강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사회적,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의술을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와 자신들의 건강 관행을 유지할 권리를 지니며, 이는 의학용의 식물, 동물, 광물에 접근하고 보존할 권리를 포함한다.
3. 국가는 비차별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농촌지역의 보건시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필수 의약품, 전염병으로부터의 면역조치, 출산 보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건 문제와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주요 보건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보건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제24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과 공동체를 유지할 권리를 지닌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자신의 가정에서 강제추방, 괴롭힘, 기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3. 국가는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뜻에 반해, 적절한 형태의 법적 혹은 기타 보호에 대한 제공 없이, 혹은 이것들에 대한 저렴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가정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부터 추방해서는 안 된다. 추방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는 물질적이거나 기타 손실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상을 제공하거나 확보해야한다.

4. 추방을 할 경우, 국가는 농민들과 농촌 노동자들이 재정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적절성, 즉, 접근가능성, 지불가능성, 주거가능성, 임차의 안정성, 문화적 적절성, 위치의 적합성, 보건, 건강, 물과 같은 핵심적인 권리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대안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제25조. 교육과 연수에 대한 권리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을 위한 훈련은 이들의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 문화적 조건, 실제적인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역사, 지식, 가치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농민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생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맞는 적절한 훈련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훈련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생산성 향상, 마케팅, 해충, 병원균, 시스템쇼크, 화학물질의 영향, 기후변화, 기후 관련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능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자녀는 인권문서에 포함된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들의 문화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국가는 농민들과 농촌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민 현장학교, 참여형 식물 육종, 동식물 보건소와 같은 공평한 참여형 농민-과학자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한다.
5. 국가는 농장 수준에서 훈련, 시장정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적 권리와 전통지식

1. 농민과 농촌 노동자는 어떠한 방해나 차별 없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적 발달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삶의 방식, 생산방법이나 기술, 혹은 관습과 전통과 같은 전통적인 지식을 유지, 표현, 통제,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도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문화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은 국제인권 표준에 따라서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자기 지역의 관습, 언어, 문화, 종교, 문학과 예술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상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의 전통적 지식, 관습, 기술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제27조. 국제연합과 기타 국제조직의 책임

1. 유엔시스템의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과 국제 및 지역 금융조직을 포함한 정부 간 조직 등은 개발 원조와 협력을 동원함으로써 이 선언문 조항의 완전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 농민과 농촌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과 수단이 확립되어야 한다.
2. 유엔과 그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과 국제 및 지역 금융조직을 포함한 국가 간 조직 등은 이 선언문 조항에 대한 존중과 완전한 적용을 촉진하고, 이후 그 효과를 후속 관리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7-02 · 충청남도 농민인권 실태 및 정책 과제

글쓴이 · 박경철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12월 31일 /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6(농촌 · 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98-8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